

수시연구 2013-07

해양수산생명자원 법령 재정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for the Legal
System of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2013. 12.

박수진 · 김진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박 수 진 : 제1장, 제2장 제1절, 제2장제2절 일부, 제3장 제4절 일부, 제4장, 제5장

● 연구진

- 김 진 엽 : 제2장제2절, 제3장

● 외부 집필진

- 양 희 철 : 부록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이 용 희(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심 영 규(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 희 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 김 한 올(해양수산부 사무관)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 연구감리자

● 황 기 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머 리 말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이래 개별국가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재확인되었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생물자원은 1차적으로 농업, 수산업, 임업 등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개체와 군집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그리고 유전자원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21세기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물자원은 그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을 활용한 신약, 신물질, 신소재의 원천소재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이 되었다.

세계경제가 바이오경제로 이행되면서 생명공학산업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2008년에 세계 생명공학산업 시장규모는 2,160억 달러에서 연평균 7.2%씩 성장하고 있다. 해양생명공학의 경우에도 전체 생명공학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작으나, 세계 해양생명공학 산업의 시장 규모는 1998년 8억 달러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28.5%의 고도 성장 하였다. 또한, 2009년에 33.5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4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해양생명공학 산업은 비교적 짧은 개발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현재 4개의 해양천연물 신약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수십 종이 임상시험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생물, 생물다양성,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200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자원적·산업적 측면에서 국내외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2012년에 이르러서야 마련되었다.²⁾

1) 해양생명공학산업 시장규모는 Data Monitor, *Biotechnology : Global Industry Guide*, 2009.10 자료 참조. 생명공학산업 시장규모는 GIA(2008, 2012), *Marine Biotechnology - A Global Strategic Business Report* 일부 수정, 현재 상태(R&D 투자, 기술개발수준 등)가 지속될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한 것임.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그러나,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부처가 이원화 되면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법률체계도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었다. 이에 연구진은 2013년 3월 해양수산부의 재출범에 따른 신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는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법률은 유사점도 있지만 상충되는 사항도 상당수 존재하고,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법률의 입법 목적,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법리적 유사성과 상충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EU, 필리핀, 호주 등 주요국의 생물자원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정책적·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정책과 실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업무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여 기존 법률의 이행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입법방향을 설정하였다.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가칭)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시의적이며 입법가능한 법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행한 우리 연구원 해양연구본부의 박수진 부연구위원, 연구진으로 수고한 김진엽 연구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 해양생명자원은 해양생물체의 실물, 해양생물유전자원, 그로부터 유래된 정보를 총칭하는 것으로 해양생물자원 보다 포괄적인 개념임.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조언해 주신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심영규 교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의 양희철 책임연구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외부 자문위원으로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해양수산부의 김한울 사무관, 한국해양대학교의 이용희 교수와 내부 자문위원으로서 적절한 지적과 조언을 주신 황기형 연구위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외에도 이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한다.

2013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김 성 귀

차 례

Executive Summary	i
-------------------	---

제1장 서론	1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입법 필요성 및 국내 법률의 비교분석	9
-------------------------------------	---

1.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입법 필요성	9
2.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국내법률 비교분석	10
1)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국내법률 현황	10
2)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법률의 상호관계 분석	23

제3장 외국의 생물유전자원 관련법령 분석	39
------------------------	----

1. 유럽연합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지침 및 규제 분석	39
1) 생명공학기술 발명품에 관련된 지침 98/44/EC 분석	39
2) 유럽위원회의 규제제안 및 유럽의회의 규제제안 수정안 보고서 분석	41
2. 필리핀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법률 분석	44
1) 필리핀 공화국 이행명령 247 및 이행규정	45
2) 필리핀 내에서의 생물탐사작업에 관한 지침	46

3) 토착민권리법 및 이행규정	48
4) 야생생물보전보호법 및 이행규정	50
3. 호주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법률 분석	52
1)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법률	53
2)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규칙	55
4. 외국의 생물유전자원 관련법령의 시사점	57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법 개정 방안 ————— 60

1. 총칙 부문 개정 방안	60
1) 법률 명칭 및 입법 목적	60
2) 용어 정의 개정	61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63
2. 해양수산생명자원 위원회 부문	64
3. 외국인의 관할 수역 내 어업활동	65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및 관리 부문	66
1)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	66
2) 분양 승인	67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익공유 및 전통지식 부문	68
1)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68
2)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69

제5장 결 론 ————— 71

1. 요약 및 결론	71
2. 정책제언 및 후속연구	72

참고문헌 ————— 75

부록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78
부록 2. 한·중·일 해양과학조사법제의 비교 분석	102

표 차례

표 1-1. 선행연구 검토	7
표 2-1. 해양수산 생명자원 관련 주요 법률 현황	11
표 2-2. 해양생명자원법과 농수산생명자원법의 비교	25
표 2-3. 해양생명자원법과 생명연구자원법의 비교	27
표 2-4. 해양생명자원법과 생물다양성법의 비교	30
표 2-5. 해양생명자원법과 유전자원접근법안의 비교	32
표 2-6.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5개 법률의 통합비교	35
표 4-1. 입법목적 규정 개정안	60
표 4-2. 해양수산 전통지식 용어정의 개정안	62
표 4-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 용어정의 개정안	62
표 4-4. 외국인 정의 규정 개정안	63
표 4-5. 다른법률과의 관계 규정 개정안	64
표 4-6. 해양수산생명자원 위원회 규정 개정안	65
표 4-7.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 규정 개정안	66
표 4-8.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개정안	67
표 4-9. 분양승인 규정 개정안	68
표 4-10.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규정 개정안	69
표 4-11.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규정 개정안	70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그림 3-1. 필리핀의 생물유전자원관련 법률 현황	44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for the Legal System of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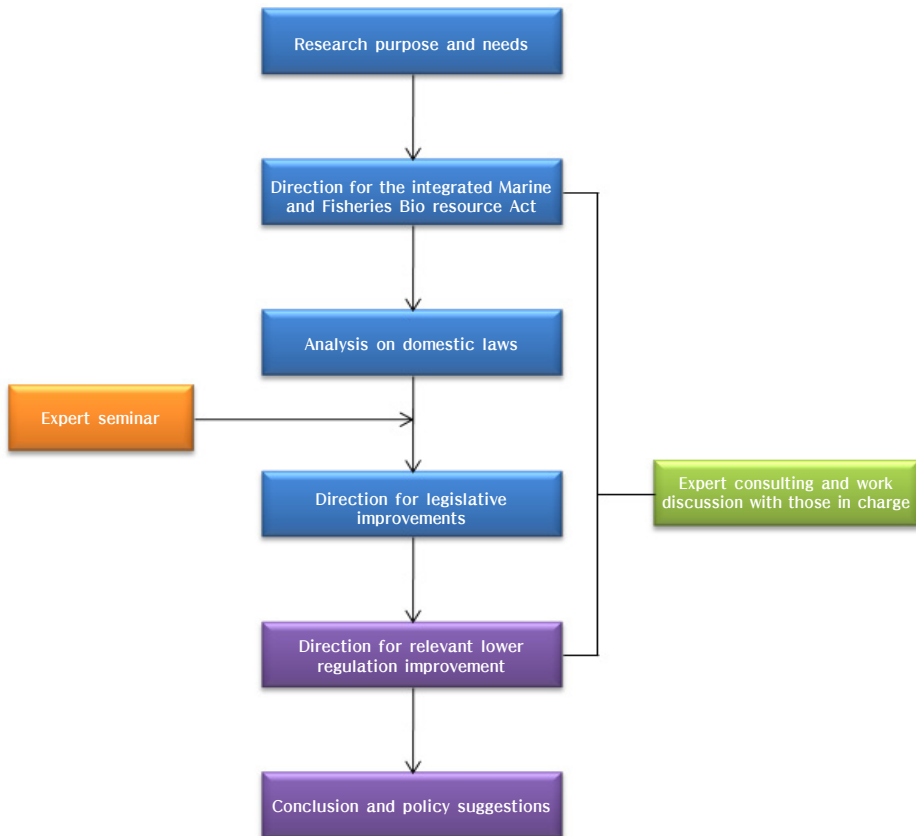
1. Purpose

- Since the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COP 10) adopted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October 2010,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ctively addressed the issues.
- Internationally, the Nagoya Protocol,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genetic resources, is highly likely to take effect at the CBD COP 12 in Pyongchang October 2014. Therefore, domestic laws and policies need to be improved to systematically respond to upcoming changes.
- Domesticall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as launched again according to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reshuffle in March 2013. Therefore, the dualized laws on maritim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 such as *the Act on Securing, Management, Use of Marine Bio Resources* and *the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Use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Bio Resources*, needs to be realigned.
- According to new ocean governance, this study aims to secure systematic management tools for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and to propose recommendations for domestic legal improvement for effective response to the Nagoya Protocol.

2. Methodologies and Feature

1) Methodologies

- The study analyzed majo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n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as well as relevant theses and research reports at home and abroad.
- It conducted comparative analyses on biological resources law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EU, Australia, and the Philippines.
- It also carried out joint research with other institutions including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and the Law School of Dong-A University which have rich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systems and policies relevant to bio resources, ocean science research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 The study improved the reflection level of policy through interviews and discussions with those who dealt with *The Act on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in the Marine Ecosystem Division and Aquaculture Industry Division and Task Force for National Marine Bio Resource Hall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It also performed correction and supplementation for the revision of '*The Act on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 through two series of expert advisory meetings.



〈Diagram 1〉 Research progress flow

2) Feature

- This study presents measures for domestic legislative improvements based on analytical results of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on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3. Results

1) Summary

- Korea has enacted various laws on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and

such enactment has been active since 2009.

-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policies were traditionally based on fisheries laws. However, since the enactment of *the Genetic Engineering Act and the Bio Engineering Cultivation Act* in 1983, legal system for R&D on genetic resources has been improved.
-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ecuring,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Biological Research Resources (2009)* and *The Act on Securing, Management, Use of Marine Bio Resources (2012)*, legislation on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has been very active.

○ Analyses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Act on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and domestic regulations

- Major laws on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such as '*The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Bio Resources*,' '*The Act on Securing, Management, Utilization of Biological Research Resources*,' '*The Act on Conservation and Use of Biodiversity*,' '*The Act on Securing, Management and Use of Marine Bio Resources*,' and '*The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tentative) has their difference in addressing various kinds of resources. However, they have similar legislative purpose of conserving, managing or using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 Most of these Acts include the provisions on the development of legal master plan, responsible organizations for effective resource management, other registered organizations and integrated resource information center.
- In particular, *The Act on Securing, Management, Use of Marine Bio Resources*, and *The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Bio Resources*, are likely to be integrated due to their provisions on access by foreigners and permission, designation of responsible organizations, approval for resources distribution and taking resources out of country.

- Analyses on major countries' laws on bio genetic resources
 - The EU, Australia, and the Philippines have enacted laws on environment and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 As for biogenetic resources, the EU has guidelines for patent on inventions developed by bioengineering. Moreover, the European Council has led discussions on regulations for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since 2012.
 - The Philippines has highly systematic legal institution on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What is distinctive is that *'The Act on Indigenous People's Right'* regulates procedures when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 is accessed to by others.
 - *The Act on Conservation of Environment and Biodiversity* comprehensively regulates environment and biological resources in Australia. Its enforcement regulations define access and benefit sharing procedures.
- Recommendations for revision of The Act on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 The reasonable title of the integrated act will be *The Act on Securing, Management, Use of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 With consideration for relevant regulations and foreign legislation cases, *'marine and fisheries traditional knowledge'* should be defined. On the other hand, definition of foreigners needs to be revisited.
 - On top of that, this study proposed revised regulations on the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 Committee, foreigner's fishing activities within jurisdictional waters, securing and management of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benefit sharing from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2) Policy contribution

- The study analyzed contents of major domestic laws on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and their correlations. Based on the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analytical results of major countries' biological resources legislations, the study suggested recommendations for the integrated *Act on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 In case that the new *Act on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is enacted, the study will help systematic management of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and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3) Expected benefits

- To strengthen status of Korea, a nation with sovereignty over bio resources
 - Expect to strengthen sovereignty over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and to effectively manage them, while contribute to facilitating use of foreign resources and joint cooperation.
- To establish systematic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 management
 - Expect to build more systematic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ocean and fisheries bio resources management by integrating laws on securing, management and use of marine bio resources and fisheries bio resource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기 이전까지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인 관행은 ‘자연적인(natural)’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은 ‘인류의 공동유산’¹⁾로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류공동유산의 원칙(Principle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이 다수설이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기존의 인류공동유산의 원칙을 부정하고, 개별 국가의 생물 주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¹⁾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의 보존은 모든 국가의 의무이며, 국제공동체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류공통관심사의 원칙(Principle of common concern of humankind)’은 주로 유전자원의 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지구상의 유전자원에 대한 보존은 모든 국가들의 의무이며,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²⁾

전 세계에서는 유용한 생명자원³⁾의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자국의 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 자원주권을 확보·확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0년 10월에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 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일명 나고야 의정

1) CBD Preamble, Article 3

2) 박수진·최수정,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대응방안 연구 -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p.16.

3) 생명자원은 동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유래된 정보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서)’가 채택되었으며, 의정서 발효 이전에 의정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생물자원부국(Like-Minded Mega-diverse Countries : LMMC)’은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형평한 이익 공유와 국제적으로 강력한 이행준수 조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게 되면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있던 해양수산생명자원법령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2012년 해양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3.5조원에서 2020년에는 7.9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해양생명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⁴⁾ 특히, 우리나라는 해양바이오 연구개발에서 필수 소재인 유용 생물자원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등 해외로부터 상당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생물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법령과의 상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규제 합리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⁵⁾

대외적으로는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있어 핵심 키를 쥐고 있다고 보이는 EU가 나고야 의정서의 비준을 준비하기 위해 2012년 4월과 5월에 ‘유럽연합 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 공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의 규칙 제안서’⁶⁾와 부속서인 ‘나

4) 현재의 연구개발 투자 및 기술개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2015년에 우리나라의 해양바이오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8천7백9십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의 2.2%를 차지하는 수준임.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참조.

5) 환경부는 2013년 12월 19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고야 의정서의 체결에 관한 위원회 결정을 위한 제안문서⁷⁾를 각각 유럽의 회 및 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그 밖에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도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국내 비준절차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⁸⁾

특히, 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인 생물다양성협약 제 12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유전자원 규범인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법령을 재정비하여야 한다.⁹⁾ 이에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령 재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 해양수산 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국인의 국내자원 획득절차, 국내자원의 분양 및 반출절차 등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하기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 해양거버넌스 출범에 맞추어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수단을 확보하고, 나고야 의정서의 실효적 대응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즉, 해양생명자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7) The Proposal for a Council Decision on the conclus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8)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 2013년 12월 현재 92개국이 서명하고, 26개국이 비준 또는 수락하였음. 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 또는 수락한 이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효됨(나고야 의정서 제33조).

9) 우리나라는 ‘11년 9월에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14년 2월에 제3차 임시정부간위원회(3th meeting of the 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ICNP3)를 개최할 예정임.

민간단체 육성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의 자원접근, 분양승인 및 국외반출 승인, 국내자원의 조사등재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현행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융합적 통합을 통해 자원접근 허가(access) 부분의 적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benefit sharing)와 전통 지식 등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을 대비하고,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단순한 조문 통합방안이 아니라 규제 일원화를 통한 법적 안정성의 제고 방안과 입법적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과 국내외 동향을 고려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해양수산 생명자원 관련 국내외 법령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제도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양생명자원 관련 주요 법률의 내용과 상호 상충관계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유럽연합(EU), 호주, 필리핀 등 주요국의 생명자원 관련 법률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향후 해양수산생명자원법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방법

(1) 문헌 및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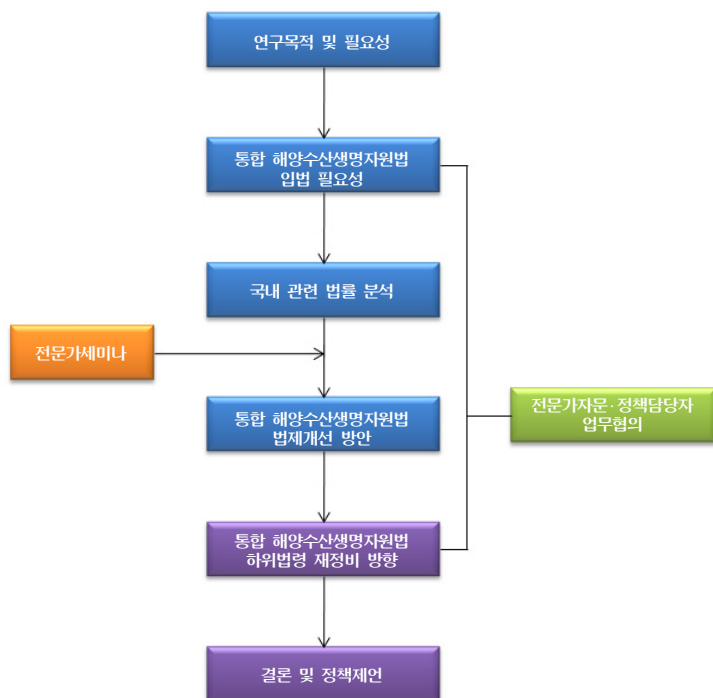
문헌 및 자료의 분석은 국내외 발표 논문, 서적, 연구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법령과 유럽연합(EU), 호주, 필리핀 등 주요국의 법령에 대한 법적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전문기관과의 협동 연구

해양생물자원, 해양과학조사, 유엔해양법협약, 나고야 의정서 등과 관련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국제환경법, 국제해양법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입법기술적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보완하였다.

(3) 관계자 의견수렴

해양수산생명자원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양식산업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 기획단 등 정부관계자의 면담과 업무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해양수산생명자원법’ 개정안의 입법 방향, 세부 조문내용에 대한 분석과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최종결과물인 해양수산생명자원법 개정안의 정책 반영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 고자 하였다.



| 그림 1-1 | 연구 흐름도

3)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본 연구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주요 법률 및 외국의 법률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내법령 정비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박용하 외(2006)는 통해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현황 및 주요 쟁점별 국가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2002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이 채택된 이후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레짐’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후 박수진 외(2008)는 해양 측면에서 생물다양성협약과 ABS레짐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국내 관련제도 및 주요국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여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법령 개선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환경부(2010)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초안에 대한 분석과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 관련 제도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본 보고서는 생명자원 관련 주요 국내 법률에 대한 주요 내용과 상호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자원 제공국과 자원 이용국가, 중간적 입장인 유럽연합(EU)의 유전자원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양수산생명자원법령의 재 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 표 1-1 | 선행연구 검토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생물다양성협약의 국가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박용하 외 (2006) -연구목적: 생물다양성협약의 국제적 동향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대응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주요국 대응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전문가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협약의 현황 및 전망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분석 및 평가 -생물다양성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대응체계 구축방안 분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 핵심논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에 관한 고찰 -연구자(년도): 박용하 외 (2007) -연구목적: ABS논의동향 및 주요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협약 상 ABS 주요논의 배경 및 내용 -주요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논의결과가 미치는 영향 -우리의 입장 및 정책방향

| 표 1-1 | 선행연구 검토(계속)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대응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박수진 외 (2008) -연구목적: 국내 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및 국제 레짐 형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국내외 연구결과 조사 분석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와 작업반 회의 자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해양유전자원의 ABS 논의동향 -주요국 제도분석 -국내 관련제도 -해양유전자원 ABS논의 대응방안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국제레짐 정책 대응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환경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위탁과제, 2010) -ABS국제협상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국내외 연구결과 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S의정서 초안의 주요 내용 -ABS 국제레짐에 대응한 주요국 사례연구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내용 분석과 대응방안 -ABS 국제레짐을 반영한 생물자원 관리제도 개선방안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나고야 의정서 대응 및 지원 연구 -연구자(년도): 박수진 외 (2012) -연구목적: 나고야 의정서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계 및 연구계에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설문조사 -설명회 -국내외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고야 의정서의 개요 및 주요내용 -나고야 의정서 단계별 가이드라인 -주요국의 나고야 의정서 법령 현황 -나고야 의정서 대응 설문조사 분석 -나고야 의정서 Help Desk 운영 방안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동향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대내외적 여건과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해양수산생명자원법령의 재정비방안을 제시하는데 강조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면담조사 및 업무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수산 생명자원법의 입법 방향 및 국내 법률 분석 -해양수산 생명자원 관련 나고야 의정서 단계별 가이드라인 -주요국의 나고야 의정서 법령 현황 -나고야 의정서 대응 설문조사 분석 -나고야 의정서 Help Desk 운영방안

제 2 장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입법 필요성 및 국내 법률의 비교분석

1.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입법 필요성

생명자원은 21세기 바이오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의 필수소재이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자원이다. 특히, 육상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양생명자원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 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은 개별국가의 자연자원이며, 동시에 인류공동의 자산으로서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중요한 발전 기반이 된다. 특히, 연안 및 해양환경(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s)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전 세계 산소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¹⁰⁾ 국내 해양생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지내 보전(in-situ conservation)과 현지외 보전(ex-situ conservation)을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와 연구개발 및 산업적인 활용을 위한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부처가 이원화 되면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법률도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각각 따로 제정되었다. 2013년 3월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이 두 법률을 통합하는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두 법률은 유사점도 있지만 상이점도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까지 고려한 개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나고

10) 박수진·최수정, 전계서, 2008, p.13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관리방안 연구』, 2006, p.12.

야 의정서가 2014년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고, 환경부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입법 형태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간 상충 문제 검토가 중요한 현안이며, 입법적 고려사항이다.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서식하거나 대학,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은 생물주권의 중요한 대상으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관리하는 동시에 유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2.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국내법률 비교분석

1)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국내법률 현황

우리나라는 해양수산 생명자원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2009년 이후 입법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적으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수산업의 대상이 아니라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유전물질(genetic materials)’,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 등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자원적 가치에 대한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1983년 「유전공학법」과 1983년 「생명공학육성법」의 입법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09년 5월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생명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 표 2-1 | 해양수산 생명자원 관련 주요 법률 현황

법률명	제정목적	주요 규정	제정	최종개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이를 통한 농수산 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 ·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4조, 제15조) · 분양승인 및 제한(제16조) ·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제24조, 제25조) 	2013.3.2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 · 생명공학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제7조) ·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제8조) ·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제10조) 	2009.5.8	2013.3.2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도모 ·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제7조) · 국가생물종 목록의 구축(제10조)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국외반출 승인취소(제11조, 제12조)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제17조) · 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제21조) 	2012.2.1	2013.2.2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주권강화 및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제8조) ·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7조, 제18조) · 분양승인, 분양승인의 취소 (제20조, 제21조) ·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5조) 	2012.6.1	2013.3.23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고야 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의 마련 · 국내생물자원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제8조) · 유전자원 등의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의 공유 (제9조) · 해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시 관련 의무 준수 (제14조) 	입법예고 (2013.12.19)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2013년 12월 현재 환경부는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의 법률(안)들의 내용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률 상호간의 상충관계 및 연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① 입법목적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 해양생명 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획득 및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외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해양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정되었다. 이 법의 총칙에서는 해양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명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이 그 입법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법률체계 및 주요내용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명 자원법’이라 약칭한다)은 총칙,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구축, 보칙 및 벌칙 등 6개장 41조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이 법에서는 해양생명자원을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정의하면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물자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 종합계획에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보호·관리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시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7조, 제8조).

한편 이 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현지내 보존 및 현지외 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채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생명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 제10조). 더불어 무분별한 해양생명자원의 해외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국제기구가 관할 해역에서 해양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 외국인·국제기구가 관할해역에서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 생산 등을 통한 획득을 하는 경우에도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11조). 이는 외국인이 내국인과의 공동연구나 개발·생산을 이유로 획득허가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 법에서는 해양생명자원 기탁 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해양

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기탁등록기관은 해양생명자원의 수탁·등록 및 평가, 채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1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와 같은 기탁등록기관 중에서 해양생명자원의 종합적인 조사, 등재, 수탁, 등록 및 평가, 기탁등록기관의 관리 및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할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법 제18조).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해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도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20조, 제22조).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해양생명자원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법 제25조).

또한 이 법에서는 정부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생명자원을 연구, 이용하는 민간기관을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8조).

(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입법 목적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2008년 8월에 제정되었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수산에 대한 관리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됨에 따라 2011년 7월에 법률 명칭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② 법률체계 및 주요 내용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생명자원법’이라 약칭한다)은 총칙,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농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농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보칙 및 벌칙 등 7개장 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 제2조에서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 수산생명자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는데 농업생명자원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의미하며, 수산생명자원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이 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더불어 현지내 보존 및 현지의외 보존 상태에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채집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며 그 보존 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을 안전

하게 보존하고 그 이용을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6조, 제7조).

외국인·국제조직이 관할 수역 내에서 연구, 개발,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수산생물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에서는 필요한 선박·도구 등을 갖추어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국제조직이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획득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제9조). 향후 해양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획득허가 조항과의 통합 작업이 필요한 중요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법에서는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하게 하였으며 또한 책임기관의 장은 농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분야별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토록 하였다. 이때 책임기관의 경우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확보·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및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관리기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채집, 특성 분석·평가와 정보화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법 제14조, 제15조). 이와 함께 이 법에서는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승인 및 제한, 취소와 국외 반출 승인 및 취소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외 반출 승인의 경우 국외 반출 승인대상 목록이 있어 해당 목록에 포함된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농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이 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농수산생

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고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게 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법 제21조, 제22조). 한편, 농수산생명자원법에서는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위원 21명으로 구성되며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차관이 그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24조, 제24조의 2, 제25조, 제25조의 2).

(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입법 목적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2009년 5월에 제정되었으며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2013년 3월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② 법률체계 및 주요 내용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라 약칭한다)은 총칙,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보칙 등 4개장 2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생명연구자원법에서는 생명연구자원을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

원 등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게 생명연구 자원의 활용촉진과 정보관리를 목적으로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7조).

한편, 법 제8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보존과 관리, 수탁·등록 및 평가를 목적으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며, 기탁등록보존기관들 중 이들을 관리하고 상호간의 정보 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법 제10조). 생명연구자원법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역할로써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자동화시스템의 설계, 개발, 구축과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법 제11조).

또한, 생명연구자원법에서는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련된 규정 즉, 투자재원의 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등을 명시하고 있다.

(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입법 목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이라 약칭한다)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생물다양성법은 1992년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과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

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나타난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입법 조치로서 2012년 2월에 제정되었다.

② 법률체계 및 주요 내용

생물다양성법은 총칙,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 보칙 및 벌칙 등 8개장 38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종내(種內), 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또한, 생물다양성법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전략에서는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시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8조).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때, 지정·고시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0조, 제11조) .

또한,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또는 이들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생물다양성센터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물자원의 목록구축,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등 소관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 생물다양성센터간의 정보공유 및 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8조). 한편,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외래생물 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외래생물에 의한 피해실태 및 현황,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제거·방제 등 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21조). 또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수입 또는 반입할 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태계 교란 생물의 수입 및 반입은 학술연구 목적 또는 교육용, 전시용 등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법 제22조, 제24조). 이들 규정은 개2011년 7월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의 「야생동·식물보호법」규정을 모태로 하여 제정된 규정이다.¹¹⁾

11) 2011년 7월 21일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4조, 제25조, 제58조 규정 참조.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련하여 생물다양성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등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7조).

(5)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① 제안 목적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가 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생물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안 되었으며 2013년 12월 현재 법제처 심사 대기상태이다.

② 법률안체계 및 주요 내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이하, ‘유전자원접근법안’이라 약칭한다)은 총칙,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 해외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 준수, 보칙 및 벌칙 등 5개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안 제4조에 따르면 이 법률은 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된 이후 접근된 유전자원 및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그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인간 유전자원 등의 적용예외 대한 조항도 두고 있다.

법률안 제6조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유전자원을 관리 및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원시책에 포함되는 4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전자원접근법안에서는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연락기관은 외교부와 환경부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들은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써 의정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법률안 제7조). 국가점검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정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법률안 제12조).

국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생물다양성법, 농수산생명자원법, 해양생명자원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중 신고를 방지하고 있다(법률안 제8조).

국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관련하여 제공자와 이용자는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제3자의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등을 포함한 상호 합의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법률안 제9조).

유전자원접근법안에서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생물다양성에 위하나 부정적인 영향 등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이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안 제10조).

또한, 해외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해당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원산지 국가 또는 이를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제공하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근하여 이용하

고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할 것과 이를 국내에서 이용한 자에게는 위의 절차 및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법률안 제13조, 제14조).

법률안 제16조에 따르면 정부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관리 및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 관리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센터에서는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관리, 해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대한 정보 조사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전자원접근법안에서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 대한 국고보조 및 재원확보, 수수료 등에 관한 조항도 두고 있다(법률안 제18조, 제19조).

2)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법률의 상호관계 분석

농수산생명자원법의 경우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존 및 관리하고 그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생명연구자원법은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법은 생물다양성협약을 이행하여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생명자원법은 해양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유전자원접근법안의 경우 나고야 의정서가 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해양생명자원법과 나머지 법률 및 법률안을 각각 비교해보

고, 5개의 법률 및 법률안을 통합적으로 비교하여 유사관계 및 상충관계에 대해 분석하겠다.

(1) 해양생명자원법과 농수산생명자원법의 비교

해양생명자원법과 농수산생명자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이들 법률은 제정목적과 계획수립, 외국인의 국내자원 접근 허가,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주요 규정은 유사한 측면이 많다. 다만, 해양생명자원법은 책임기관을 기탁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신청에 의해 지정하는 방식이라면, 농수산생명자원법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을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즉,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과학원과 같이 소속기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농림수산물부가 산하 소속기관으로 다양한 연구기관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지정 방식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제정목적에 있어서 두 법률은 해양생명자원 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해양생명자원법의 경우에는 주권강화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의 권한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두 법률 모두 해양, 농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지내, 현지외 자원을 조사, 채집하고 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해 분석 및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우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 표 2-2 | 해양생명자원법과 농수산생명자원법의 비교

법률명 주요사항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주권강화 및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 확보	·농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계획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양 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의 보 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외국인의 접근 관련 허가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하고자 할 때는 해 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책임기관의 지정 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수 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기탁등록기관 중 책임기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탁등록기관 및 책 임기관을 취소 및 시정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의 관리를 위해 농수산 생명자원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 며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음. ·기관지정의 취소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분양승인 및 국외반출승인 관련	·해양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나 국 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함.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 또는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함.
기반 및 인프라 구축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민간기관 단체 육성 지원 및 인력양성 과 국제협력 촉진 등.	·민간기관 단체 육성 지원 및 인력양성과 국제협력 촉진 등.
기타	·보칙 및 별칙을 두고 있음.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보칙 및 별칙을 두고 있음.

외국인의 획득 및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두 법률 모두 해양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물자원을 획득하고자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공동획득의 허가,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허가 등의 취소·중지, 조건부허가 등의 조치를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책임기관 등에 관련하여, 해양생명자원법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기

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반면, 농수산생명자원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책임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양생명자원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하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농수산생명자원법에서는 취소 및 시정에 관련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해양생명자원법과 농수산생명자원법은 모두 분양승인 및 국외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해양생명자원과 농수산생명을 분양 및 국외반출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농수산생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포함)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수산생명자원법에서는 국외반출의 경우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만들어 이에 포함된 농수산생명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끔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기반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해양생명자원법에서는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산생명자원법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농수산생명자원법에서는 농수산생명의 정책의 수립을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2) 해양생명자원법과 생명연구자원법의 비교

해양생명자원법과 생명연구자원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상호 비교하면 <표 2-3> 과 같다. 해양생명자원법과 생명연구자원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법 목적과 법률 체계이다. 즉, 생명연구자원법은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 관리하는 동시에 생명연구자원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해양생명자원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있는 해양생명자원에 대해 접근할 경우에 대비한 투명하고 명문화된 획득 허가 절차를 둠으로써 자원 주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

| 표 2-3 | 해양생명자원법과 생명연구자원법의 비교

법률명 주요사항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 및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 · 생명공학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계획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정보관리를 위해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외국인의 접근 및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하고자 할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없음
책임기관의 지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양생명자원기탁등록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기탁등록기관 중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을 취소 및 시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기관의 관리 및 정보교류를 위해 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분양승인 및 국의 반출승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나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없음
기반 및 인프라 구축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민간기관 단체 육성 지원 및 인력양성과 국제협력 촉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공동연구의 지원,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칙 및 벌칙을 두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칙을 두고 있음

또한 해양생명자원법의 경우, 국내외 분양 및 반출승인 조항 등을 통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해양생

명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생명연구자원법과 차별화된다.

구체적으로 이 두 법률의 세부사항을 비교해 보면,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구체적인 입법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즉, 해양생명자원법의 경우 주권 강화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국가의 생명자원에 대한 권한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계획에 관련해서는 두 법률 모두 생명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두고 있으며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의 경우 특정 부처의 장관이 아닌 정부에게 수립 및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기관 등에 관련해서는 해양생명자원법과 생명연구자원법 모두 생명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탁등록기관과 책임기관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생명연구자원법에서는 특정 부처의 장관이 아닌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기반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해양생명자원법에서는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생명연구자원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끝으로 생명연구자원법은 해양생명연구자원법 상 외국인의 획득허가 및 공동획득허가, 분양승인, 반출승인과 같은 행위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3) 해양생명자원법과 생물다양성법의 비교

해양생명자원법과 생물다양성법의 체계와 주요내용을 비교해보면 <표 2-4> 와 같다. 생물다양성법은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목적으로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규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외래생물 및 교란생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모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해양생명연구자원법의 입법 목적이나 주요 내용과 차이점이 많다. 또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다양성 조사,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정부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소관 분야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주도적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 해양생명연구자원법과 차이가 있다.

우선,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두 법 모두 생물다양성 또는 해양생명자원의 보전 및 관리,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해양생명자원법이 생명자원에 대한 관리에 관한 국내법인 반면에 생물다양성법은 생물다양성협약이라는 국제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편, 계획에 관련하여 두 법률 모두 5년마다 종합계획 또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여 각각의 목적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생물다양성법의 경우 특정 부처의 장관이 아닌 정부에게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법은 추가로 외래생물자원관리 계획을 5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접근 및 허가에 관련하여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하고자 할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원의 관리체계에 있어서도 해양생명자원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탁등록기관과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법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자원관리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는 체계이다.

| 표 2-4 | 해양생명자원법과 생물다양성법의 비교

법률명 주요사항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 및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계획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함. ·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자원의 관리를 위한 외래생물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외국인의 접근 및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하고자 할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책임기관의 지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양생명자원기탁등록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기탁등록기관 중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을 취소 및 시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물다양성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센터간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야 함.
분양승인 및 국외반출승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나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이를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해 우려종 생물의 수입 및 반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생태계교란생물의 경우 학술연구 목적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입 등을 금지함.
기반 및 인프라 구축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민간기관 단체 육성 지원 및 인력양성과 국제협력 촉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등을 포함하는 국가생물종목록을 구축하여야 함. ·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칙 및 벌칙을 두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자원의 이용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 · 보칙 및 벌칙을 두고 있음.

한편, 분양승인 및 국외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해양생명자원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생물다양성법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으로 지정하여 이를 반출할 경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분양승인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해양생명자원법의 경우에는 국내 해양생명자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생물다양성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전 가치가 높은 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생물다양성법에서는 위해 우려종 및 생태계 교란 생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기반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해양생명자원법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생물다양성법에서는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 및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생물다양성법에서는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와 전통지식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해양생명자원법과 유전자원접근법안의 비교

해양생명자원법과 유전자원접근법안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상호 비교하면 <표 2-5> 와 같다. 유전자원접근법안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주요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입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법률안이므로 해양생명자원법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원접근법안은 법률의 적용 범위를 ‘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된 이후 접근된 유전자원 및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법안 제4조). 이는 2010년 10월에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가 2013년 12월 현재까지 의정서 발효 요건인 50개국의 비준 또는 수락이 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 표 2-5 | 해양생명자원법과 유전자원접근법안의 비교

법률명 주요사항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주권강화 및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고야 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의 마련 · 국내생물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계획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없음.
외국인의 접근 및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하고자 할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책임기관의 지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양생명자원기탁등록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기탁등록기관 중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을 취소 및 시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락기관은 외교부와 환경부가 담당 · 국가책임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담당 · 국가접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담당
분양승인 및 국외반출승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나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없음.
기반 및 인프라 구축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민간기관 단체 육성 지원 및 인력양성과 국제협력 촉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보조 및 재원확보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칙 및 벌칙을 두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등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제공자와 이용자는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공유를 위해 상호합의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 해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등에 대해 접근 및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보칙 및 벌칙을 두고 있음.

구체적으로 두 법률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해양생명자원법은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이후 국제적으로 재확인 된 생물자원 주권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유전자원접근법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유전자원접근법안의 경우에는 생물다양성법의 경우와 같이 나고야 의정서라는 국제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해양생명자원법과 달리 유전자원접근법안에서는 계획이나 전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유전자원의 접근과 관련해서는 해양생명자원법이 외국인이나 국제조직,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등에게만 획득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반면에, 유전자원접근법안의 경우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국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접근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기관 등에 관련하여, 해양생명자원법에서는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을 두고 있으며 유전자원접근법안에서는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국가연락기관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명자원법의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은 일정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국공립, 민간 연구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이라면, 유전자원접근법안 제7조 상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은 나고야 의정서 상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정부기관으로서, 성격이 다르다. 즉, 유전자원접근법안 상 국가연락기관은 의정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s : NFPs)’을 의미하며, 사전통보승인(PIC : Prior Informed Consent)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MAT : Mutually Agreed Terms) 체결 절차 및 정보 등을 사무국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 CNAs)은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개별국가의 법률, 행정, 정책적 조치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가해주는 책임기관으로, 접근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서면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기타 PIC, MAT요건, 이해관계자의 참여, 협상 프로세스 등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¹²⁾ 물

론 유전자원접근법안에서는 이들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¹³⁾ 또한 유전자원접근법안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생물다양성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농수산생명자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해양생명자원법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특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유전자원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의 제공자와 이용자로 하여금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조건을 작성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 한편, 국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금지나 제한조치¹⁵⁾, 해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국내 이용자의 자원 제공국 관련 절차 준수¹⁶⁾,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 관리센터의 설치·운영¹⁷⁾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5)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법률의 통합비교

해양생명자원법, 농수산생명자원법, 생명연구자원법, 생물다양성법 등 4개의 현행 법률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유전자원접근법안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표 2-6>과 같다. 제정목적은 살펴보면, 개별 법률에서 지칭하는 자원의 명칭 및 종류는 서로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생물 및 생명자원의 보전 및 관리·이용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12) 박수진 외, 『나고야 의정서 지원 및 대응 연구』, 국토해양부, 2012, pp. 24-26.

13) 유전자원접근법안 제7조.

14) 유전자원접근법안 제9조.

15) 유전자원접근법안 제10조.

16) 유전자원접근법안 제13조 부터 제15조.

17) 유전자원접근법안 제16조.

| 표 2-6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5개 법률의 통합비교

법률명 주요 사항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제정 목적	·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주권강화 및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 확보	· 농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이를 통한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 · 생명공학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도모 ·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의 마련 · 국내생물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도모
계획 관련	·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양생명자원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정보관리를 위해 생명연구자원 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 정부는 국가생물 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함. ·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관련 규정 없음.
외국인의 접근 및 허가 관련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관련 규정 없음.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내외국인 구분없이 접근신고 필요
책임 기관의 지정 관련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을 취소 및 지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나 기탁기관을 지정·운영 가능	·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장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을 지정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 가능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물다양성센터 운영가능 ·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센터간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 국가연락기관은 외교부와 환경부 · 국가책임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 · 국가점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분양승인 및 국외반출승인 관련	· 해양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나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 또는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 규정 없음.	· 환경부장관은 국외반출승인 대상생물자원을 지정·고시, 국외반출 승인 필요 · 위해 우려종의 경우 수입 및 반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생태계 교란생물의 경우 학술연구 목적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외는 수입 등을 금지함.	· 관련 규정 없음.

| 표 2-6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5개 법률의 통합비교 (계속)

법률명 주요 사항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기반 및 인프라 구축 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에 관 한 통합정보시스템 을 구축 운영하여야 함.	·민간기관 단체 육성 지원 및 인력양성과 국제협력 촉진 등	·관련 기관의 육성·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공동연구의 지원, 생명연구자원 의 활용 등	·환경부장관은 국내 에 서식하는 생물종 의 학명 등을 포함 하는 국가생물종목 록을 구축하여야 함. ·국가생물다양성 정 보의 종합적인 관리 를 위하여 국가생물 다양성 정보공유체 계를 구축운영하여 야 함. ·연구개발 및 전문인 력 양성 등	·국고 보조 및 재원 확보 등
기타	·보칙 및 벌칙을 두 고 있음.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한 농 수산생명자원심의위 원회를 두고 있음. ·보칙 및 벌칙을 두 고 있음.	·보칙을 두고 있음.	·생물자원의 이용등 으로부터 발생한 이 익의 공정하고 공평 한 공유 ·전통지식보호를 위 한 시책을 추진 ·보칙 및 벌칙을 두 고 있음.	·국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등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자 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제공자와 이용자는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의 공정 하고 공평한 이익의 공유를 위해 상호합 의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해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등에 대해 접근 및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의 절차 를 준수하여야 함. ·보칙 및 벌칙을 두 고 있음.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물다양성법과 유전자원접근법안의 경우 국제협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른 법률과 크게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 통합생명자원법의 주요 입법목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전 및 관리로 설정하고, 나고야 의정서 등 국내외 동향에 대한 입법적 고려는 세부 조문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계획에 관련하여 일부 법률은 기본 또는 종합계획의 형태를 일부는 전략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5년 단위로 장관에 의해 수립 및 시행되고 있다. 반면 유전자원접근법안의 경우는 별도의 계획이나 전략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인의 접근 및 허가 관련하여 해양생명자원법과 농수산생명자원법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 외국인 등이 해양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획득 또는 취득하고자 할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법에서는 외국인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을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고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모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중복허가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 해양생명자원법에서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전자원접근법안의 경우 내외국인 구분없이 국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접근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칫 국내 유전자원을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책임기관 등에 관련하여, 해양생명자원법과 농수산생명자원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운영 및 취소하게 하고 있으나, 생명연구자원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양승인 및 국외반출승인에 관련하여 해양생명자원법과 농수산생명자원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생물다양성법에서는 농수산생명자원법에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경우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에 해당되는 해양생명자원법에 따른 해양생명자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모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 역시 향후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에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반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해양생명자원법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법에서는 국가생물종목록 및 국가생물다양성목록을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법과 달리 자원의 체계적인 확보, 관리, 이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통합해양생명자원시스템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조사·수집, 등재,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3 장 외국의 생물유전자원 관련법령 분석

1. 유럽연합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지침 및 규제 분석

유럽연합(EU)은 환경보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 및 규제를 제정·시행해 왔으며 이 중 일부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장에서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련된 지침 및 규제에 해당하는 1998년 7월에 시행된 「생명공학 기술 발명품에 관련된 지침 98/44/EC」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와 2012년 10월에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후 권고를 위해 유럽의회에 제출된 「유럽연합 내에서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형평한 이익공유에 관련된 규제에 대한 제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동 제안에 대하여 유럽의회에서는 수정사항을 포함한 보고서(Draft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를 발표하였는데 동 보고서에 포함된 수정·권고된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1) 생명공학기술 발명품에 관련된 지침 98/44/EC 분석

유럽연합은 산업발전에 있어서 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과 이로 인한 발명품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8년에 동 지침을 채택하였다.¹⁸⁾

동 지침은 크게 특허의 대상 및 발명품의 범위에 관한 특허자격(patentability), 특허로 인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물질이나 상품의 범위에 관련된 보호의 범위(scope of protection), 특정한 경우 당사자간의 특허사용허가에 관련된 의무적 상호특허사용허가(compulsory cross-licensing), 생물자원의 기탁(deposit) 및 접근, 재기탁에 관련된 조항(Deposit, access and re-deposit of a biological material) 및 보칙(Final Provisions) 등 5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각 장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특허자격에 관하여 동 지침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특허법을 조정하여 생명공학기술 발명품을 보호하여야 하며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¹⁹⁾ 또한, 동 지침에서는 각종 용어정의와 함께 생명공학기술 발명품에 해당되는 생물물질 또는 제품의 범위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²⁰⁾

둘째로, 보호범위에 관련된 2장에서는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생물자원 및 절차(process)의 범위에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²¹⁾

셋째로, 의무적 상호특허사용허가에 관한 3장에서는 사육자가 사전특허(prior patent)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일정 식물종에 관한 권리를 획득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생명공학기술 발명품 특허보유자가 사전 식물종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특허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의무적 상호특허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회원

18)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 EPO)의 행정위원회는 1998년 12월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의 지침(the Directive on biotechnology patents) 이행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허법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EPC의 이행규정은 1999년 6월 16일 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s)으로 수정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Sigrid Sterckx, *Biotechnology, Patents and Morality*, Ashgate in England, 2000, pp.37-45 참조.

19)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Article 1.

20) Ibid. Articles 2-5.

21) Ibid. Articles 8-10.

국들은 사용을 허가하는 담당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²²⁾

넷째로, 4장에는 기탁, 접근 및 재기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기탁된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은 샘플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본 장에서는 특허신청공개전, 특허신청 공개 후 특허사용허가 사이 및 특허사용허가 후 등의 시기로 나누어 접근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샘플제공의 조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²³⁾

마지막으로, 동 지침에 따라 해당 지침의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은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²⁴⁾

2) 유럽위원회의 규제제안 및 유럽의회의 규제제안 수정안 보고서 분석

「유럽연합 내에서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형평한 이익공유에 관련된 규제에 대한 제안」은 유럽연합 내에서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규제를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며 나고야 의정서의 목적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형평한 공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국가가 주권을 가지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아래에서는 동 규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동 규제에서는 우선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용자는 특정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하여야 한다.²⁵⁾ 이에 대해 의회의 수정안에서는 해당 법률에 의해 명시된 상

22) *Ibid.* Article 12.

23) *Ibid.* Article 13.

24) *Ibid.* Article 15.

25)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Article 4.

호합의조건(MAT)에 기반한 사전통보승인(PIC)에 의해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PIC과 MAT에 기반해서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이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될 것을 요구함²⁶⁾으로써 PIC 과 MA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 유전자원신탁등록부(Union register of trusted collections)를 설치하여 해당 등록부에 등록된 유전자원 기탁등록기관에서 유전자원을 획득한 이용자의 경우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²⁷⁾

유럽연합 유전자원신탁등록부에는 기준을 충족하는 유전자원 기탁등록기관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각 회원국은 관할권 내에 유전자원신탁등록부에 등록을 원하는 기탁등록기관이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탁등록기관에 관련된 정보를 유럽집행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에는 제3자에 유전자원 및 관련 정보 샘플을 제공하는데 있어 표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유전자원 및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및 유전자원 및 관련정보의 교환을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²⁸⁾

동 규제에서는 이용자의 이행 감독을 위해 공공연구자금을 받은 모든 수령자들에게 상당한 주의를 다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들에게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위한 시장허가를 받을 때 동 규제 ‘4조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선언’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²⁹⁾ 이와 관련해서 의회의 수정안에서는 ‘4조에

26) 유럽의회 수정안 Amendment 36 일부 (*1a.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shall only be transferred to other users if in accordance with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27)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Article 4.

28) *Ibid.* Article 5.

29) *Ibid.* Article 7.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 '4조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선언'하도록 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이행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³⁰⁾

또한, 동 규제에는 모범관행(best practice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어떤 이용자 연합이 모범관행으로써 그 절차 및 메커니즘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유럽집행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모범관행으로써 인정을 받은 후에 해당 연합은 개선 및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유럽집행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한다. 향후 변경사항으로 인해 더 이상 모범관행으로 인정하기 힘든 경우 유럽집행위원회는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³¹⁾ 이에 관해 의회의 수정안에서는 이용자 연합에 의해 제출된 정보 뿐만 아니라 관련 제공자, 이용자,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및 토착사회로부터 제공된 정보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모범관행으로 인정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³²⁾ 동 규제에서는 이용자의 동 규제의 조건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게 이행을 검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행 검사에는 이용자의 의해 취해진 조치, 관련 서류 및 기록의 검사와 함께 현장 검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동 규제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행 인증서를 통해서도 이용자가 이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³³⁾ 관련 기관은 이행 검사의 기록을 최소한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³⁴⁾

30) 유럽의회 수정안 Amendment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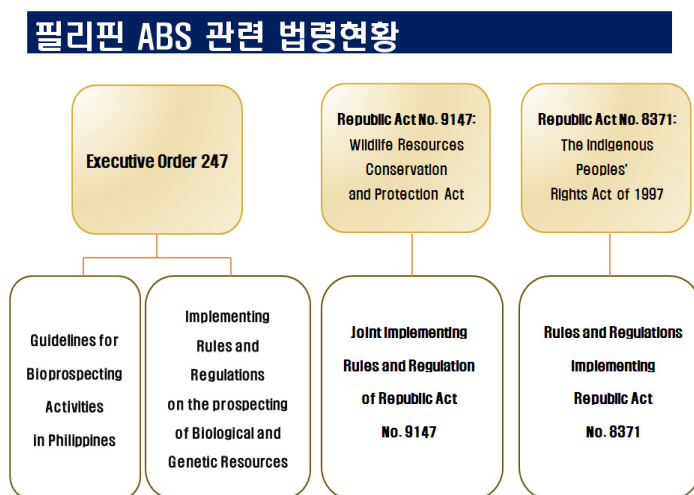
31)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Article 8.

32) 유럽의회 수정안 Amendment 50.

33)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Article 9.

2. 필리핀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법률 분석

필리핀은 풍부한 생물유전자원을 가진 국가 중 가장 체계적인 법체계를 가진 국가 중 한 국가로써 생물유전자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여 왔다.³⁵⁾ 필리핀의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은 <그림 3-1>과 같다. 특히,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보승인(PIC), 상호합의조건(MAT) 및 이익공유(BS)등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 그림 3-1 | 필리핀의 생물유전자원관련 법률 현황

34) *Ibid.* Article 10.

35) 필리핀의 생물다양성은 매우 풍부한 데, 약 13,500 식물종이 필리핀 숲에서 발견 될 수 있음. 이들 식물종은 세계 식물구계의 5%를 대표함. 종자식물은 200종과 15,000속으로 추정되며, 동물(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담수 생태계, 연안 및 해양 생태계, 그리고 농업식물에서도 매우 높은 다양성을 나타냄. Natalie P. Stoianoff, "Accessing Biological Resources - Complying with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p.142.

1) 필리핀 공화국 이행명령 247 및 이행규정

필리핀은 1994년 2월에 「필리핀 공화국 이행명령」(Executive Order No. 247)의 초안작업을 시작하여 최종안을 1995년 5월에 발표하였으며 이후 이행을 위한 이행규정은 1996년 6월에 제정되었다.³⁶⁾ 이후 유전자원에 관한 접근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인 이행명령 247이 제정되었다.³⁷⁾

동 이행명령 및 이행규정은 생물유전자원 탐사규제를 통해 생물유전자원을 보전·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을 보장하여 국가에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³⁸⁾

동 이행명령 및 이행규정에서는 필리핀 내의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자와 이용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체결하는 연구협정(research agreement)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연구협정은 그 목적에 따라 학술연구협정과 상업연구협정으로 나뉜다. 학술연구협정의 경우 순수한 학술연구목적으로 생물유전자원을 채집하고자 할 때 체결하는 협정이며 생물유전자원의 채집이 영리목적을 포함할 경우 체결하는 것이 상업연구협정이다.

동 이행명령의 이행규정에서는 연구협정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필리핀 내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요건으로써 연구제안서와 의향서, 신청서 및 토착민, 지역사회, 보호구역운영이사회, 사유지주로부터 획득한 사전통보승인 인증서 등의 서류와 수수료를 제

36) 필리핀은 CBD의 ABS 관련 규정을 처음으로 국내법에 반영한 국가인데, 일반적인 제도적 틀은 대통령의 행정명령(EO)247(1995)에 기초하고 있음. 1996년에 EO 247을 위한 이행규칙 및 규정에 대한 명령을 제정하였고, 부서행정명령 96-20(DAO 1996)을 마련하였음. Natalie P. Stoianoff, *Ibid.*, p.143.

3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대응방안 연구 -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2008, pp. 94-95.

38) Executive Order 247, Section 1.

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협정 절차에 따르면 우선, 사전통보승인 인증서 등의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생물유전자원 관계부처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된 연구제안이 이행명령 247의 범위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는 추가서류를 제출한다. 이후 신청자는 생물유전자원 관계부처위원회에 제공자로부터 획득한 사전통보승인서를 제출하며 해당 위원회는 서류를 평가한 후 관련부처에 제출한다. 관련부처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의해 양호하게 평가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연구협정 신청을 승인한다.³⁹⁾ 이처럼 이행명령 247 및 이행규정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관련된 체계적인 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이행규정에서는 PIC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르면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PIC 인증서를 토착민, 지역사회, 지역정부, 보호구역운영이사회 또는 사유지주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작업에 대한 정보를 해당 지역 토착민에게 공시하고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⁴⁰⁾

이외에 동 이행명령 및 이행규정에서는 생물유전자원 관계부처위원회의 구성 및 그 역할에 관한 내용 및 벌금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필리핀 내에서의 생물탐사작업에 관한 지침

필리핀은 생물다양성협약의 회원국으로써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타 법률들을 기반으로 2005년 1월에 「필리핀 내에서의 생물탐사작업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자원제공자에 의한 사전통보승인획득 및 생물탐사작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와 관련된

39) Ibid. Section 6.

40) Ibid. Section 7.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필리핀 내에서 발견되는 현지 내, 현지 외 생물자원 및 채집물을 이용한 모든 생물탐사작업에 적용된다. 41)

동 지침에서는 생물탐사작업의 조직에 관련된 사항, 생물탐사작업 수행의 절차 및 요건, 채집 한도 및 수수료, 사전통보 승인, 이익공유 방식에 관련된 지침, 이행 감독에 관련된 사항 등을 다루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사전통보 승인을 획득하는 절차와 필리핀 내에서 생물탐사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그 진행절차 및 이익공유 방식에 관련된 지침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통보 승인의 획득을 위해 토착민 및 사유지 소유자와 같은 자원 제공자들에게 이들의 영역내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탐사작업을 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통지(notification)하여야 한다. 이후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구역운영이사회(PAMB) 및 부족위원회에게 부족회의를 요청하여 부족회의에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제안서를 부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PAMB 의장 또는 부족장은 이들간의 협의에 따라 양호한 결정이 도출되었을 경우 이와 같은 협의 결과에 따라 사전통보 승인 인증서를 발행한다.⁴²⁾ 이처럼 필리핀은 사전통보 승인의 발급시 토착민 및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근거로 하여 사전통보 승인을 허가하는 엄격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 지침에서는 생물탐사작업에 관련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필리핀 내의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탐사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구역야생생물청(PAWB) 및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와 같은 이행기구들에게 필리핀내의 자원 제공자들과의 계약에 관련된 조건 및 정보에

41)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Section 1-2.

42) *Ibid.* Section 13.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행기구는 탐사작업조건 목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탐사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료 및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자원 제공자의 사전통보 승인을 요청하고 이익공유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탐사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행기구에 사전통보승인서 및 이행조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이행기구들의 기술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승인한다.⁴³⁾ 사전통보 승인의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필리핀은 생물탐사작업에 관한 절차에 관해서도 여러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동 지침에서는 또한 이익공유 방식에 관한 지침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자원 제공자들의 대표들이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이익공유 방식에 대해 협의하며 협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발생한 이익은 자원 이용자에 의해 협의된 기간동안 협의된 양만큼 정부와 제공자에게 제공되며 이익의 형태에는 수수료 및 로열티와 같은 금전적 이익과 장비, 기술이전, 교육 및 능력 배양과 같은 비금전적 이익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⁴⁾ 이처럼 동 지침에서는 이익공유의 협의방식 및 그 형태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동 지침에는 이행감독을 위한 수단으로써 보고 의무, 공정한 이익공유의 확인을 위한 지수의 활용, 개별 작업의 현황보고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이행감독 등에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3) 토착민권리법 및 이행규정

필리핀은 자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토착민들의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화국법 8371 : 토착민권리법」

43) Ibid. Section 8.

44) Ibid. Sections 14-17.

(REPUBLIC ACT NO. 8371) 및 그 이행규정(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REPUBLIC ACT NO. 8371)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 세부적인 목적으로써 토착민 및 토착문화공동체의 권리증진, 토착문화공동체 및 토착민의 자유 및 권리·참여·문화적 진정성의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 및 이행규정은 토착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주요 8가지 사안 즉, 전통영역에 대한 권리, 자치 및 권한 강화에 관한 권리, 사회정의와 인권, 문화적 진정성, 국가토착민위원회, 전통 영역의 구획 및 인정, 권리 이행의 절차와 관할권 및 전통영역기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명확하게 인정된 토착민이 없으며 토착민에 대한 권리 보호가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주요서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만 간략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우선, 이 법에서 전통영역이란 토착민 및 토착문화공동체가 소유 및 이용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전통영역에 대한 권리에는 소유권, 토지 및 천연자원개발권, 영역거주권, 이주규제권, 분쟁해결권 등이 포함된다.⁴⁵⁾ 특히, 전통영역의 설정 및 인정시 토착민 및 토착문화공동체가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⁴⁶⁾ 또한, 전통 영역에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관습법의 적용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다.⁴⁷⁾

둘째로, 이 법에서는 토착민 및 토착문화공동체의 자결권, 자치권, 의사결정참여권 및 개발에 있어 우선순위 결정권 등을 보장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⁴⁸⁾

셋째로, 이 법에서는 토착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인 국가토착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토착민위원회는

45) Republic Act No. 8371 Sections 4-7.

46) *Ibid.* Section 51.

47) *Ibid.* Section 65.

48) *Ibid.* Sections 13-17.

대통령집무실 산하의 기구로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로는 토착민 및 토착문화공동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증진과 토착민 및 토착문화공동체의 개발을 위한 법정책의 등이 있다.⁴⁹⁾

넷째로, 필리핀은 전통영역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전통영역기금은 전통영역의 설정 및 개발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보상관련 비용 충당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 ⁵⁰⁾

이외에도 이 법에서는 토착민과 토착문화공동체가 다른 필리핀 시민이 가지는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토착민 및 토착문화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 및 전통을 보호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두고 있다.

4) 야생생물보전보호법 및 이행규정

필리핀은 자국 내의 야생생물 보전 및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보전보호법」(REPUBLIC ACT NO. 9147) 및 이행규정(JOINT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 PURSUANT TO REPUBLIC ACT NO. 9147)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 및 이행규정의 목적에는 야생생물종 및 서식지의 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의 증진, 야생생물의 채집 및 거래 규율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⁵¹⁾

이 법 및 이행규정은 크게 야생생물보전 및 보호관련 일반규정, 위기종 보호관련 규정 및 위기종과 외래종의 등록 및 불법행위 관련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야생생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에서는 야생생물 및 부산물, 파생물의 채집, 소유 및 수출입 등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49) *Ibid.* Sections 38-40, 44.

50) *Ibid.* Section 71.

51) Joint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Pursuant to Republic Act No.9147 Section 2.

다루고 있다. 야생생물의 채집시 채집행위가 야생생물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며 채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 법의 이행규정에 따르면 야생생물의 채집시에 관련 토착민에게 사전통보 승인 또는 관련 지역정부에 사전 허가(clearance)를 받아야 하며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PAMB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⁵²⁾ 야생생물을 수출입할 때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야생생물의 수령인은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행규정에 따르면 장관은 외래생물에 관한 수입관련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⁵³⁾ 또한, 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외래생물이 필리핀에 유입 될 수 있으며 이행규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⁵⁴⁾

이 법 및 이행규정에서는 위기 종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위기 종 여부는 장관이 판단 할 수 있으며 위기 종은 멸종 위기 종, 위기 종, 취약 종 및 기타 형식으로 분류된다.⁵⁵⁾ 또한 위기 종 및 부산물, 파생물의 채집은 과학적 또는 증식의 목적을 위해 인가받은 개인, 기업,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에게 허가되며 보전 목적의 위기 종 사육은 권고되나 상업적 목적의 사육은 일정 조건을 충족 할 때만 허가된다. 또한 이행규정에서는 장관에게 보전 및 증식목적 허가권 발행을 위한 조건을 정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⁵⁶⁾

이 법 및 이행규정에서는 위기 종과 외래종의 등록에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법 시행 12개월 이후 장관은 개인 또는 법인이 수집한 모든 위기 종 및 법 시행 이전에 반입된 외래종을 등록할 기간을 설정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경과 후 등록인증 없이 소유하고 있는 위기

52) *Ibid.* Section 7.

53) *Ibid.* Section 11.

54) *Ibid.* Sections 12-13.

55) *Ibid.* Section 22.

56) *Ibid.* Sections 23-24.

중은 정부가 압수 할 수 있다. 특히, 이행규정에 따르면 위기 종 또는 외래 종의 소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⁷⁾

마지막으로 이 법에서는 야생생물의 파괴, 번식체계에 대한 손상, 방화, 벌목 및 서식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 및 각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및 징벌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⁵⁸⁾

3. 호주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법률 분석

호주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가진 생물자원부국인 동시에 생물유전자원의 이용국이다. 호주는 1993년 6월 CBD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제 논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 왔다.⁵⁹⁾ 호주는 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련하여 1999년에 CBD 협약의 국내화를 위한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법률」(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2000년에는 시행규칙으로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규칙」(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Regulation)을 채택하였다. 이 법률 및 규칙은 현재 환경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⁶⁰⁾의 소관이다.

57) *Ibid.* Section 26.

58) *Ibid.* Sections 27-28.

59) 정서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국제레짐(안) 분석을 통한 국내 대응전략 마련』, 2008, p. 72.

60) 2013년 9월 18일에 시행된 행정명령(Administrative Arrangements Order)을 통해 ‘환경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가 창설되었으며 이전의 ‘지속가능성·환경·수자원·인구공동체부’(Department of Sustainability, Environment, Water, Population and Communities) 부의 업무가 환경부로 승계되었음.

본 장에서는 호주의 해양생물자원을 포함한 생물유전자원에 관련된 주요 법제도인 위의 법 및 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법률」은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이 법은 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며 이를 위한 토착민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크게 환경보호, 양자협정, 환경평가 및 승인, 생물다양성 및 유산의 보전 등으로 구성되며 각 사안별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 법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호주의 환경을 세계유산(World Heritage),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 해양환경(Marine Environment), 대보초지역(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을 포함한 여러 범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호주 환경내에 서식하고 있는 위기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법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한 요구조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⁶¹⁾ 예를 들어 위기종 및 위기군의 경우 멸종위기종, 심각위기종, 위기종, 취약종, 심각위기군, 위기군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거나 미칠 것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이 법에는 다른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 금지되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거나 연방정부와 행위가 발생한 주정부 또는 자치단체 간의 양자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 그러한 허가가 필요치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²⁾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자치단체 등은 환경보호, 천연자원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보전의 증진, 환경평가 및 승인의 적절한 절차보장과

61) EPBC Act, Chapter 2, simplified outline of this Chapter.

62) *Ibid.* Chapter 2, Part 3, Division 1, Subdivision C.

환경평가 및 승인 절차에서의 중복최소화 등의 목적을 가진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환경부장관이 양자협정을 체결하며 양자협정이 체결되면 양자협정 체결의 이유 등을 포함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양자협정에 포함된 행위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⁶³⁾ 양자협정은 이 법의 목적에 조화되고 기타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장관에 의해 체결될 수 있다.⁶⁴⁾ 양자협정의 중지 및 취소에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르면 장관이 협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결정하여야 하며 중지 및 취소에 대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⁶⁵⁾

환경평가 및 승인 관련 부분에서는 행위의 평가 및 승인에 관련된 내용 등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내용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의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의 영향평가, 행위의 승인, 전략적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 법에 따르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행위에 관한 제안에 관해 인지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장관에게 행위에 대한 제안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관은 자신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평가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장관은 제안된 행위가 승인을 필요로 하는지 평가를 할 때, 필요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⁶⁶⁾ 또한 제안된 행위의 영향평가는 장관에 의해 인정된 절차에 의해 제안자에 제공된 사전자료에 대해서 또는 공공환경보고서 및 환경영향지침 등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외에 본 장에서는 승인 후 승인에 따른 조건을 준수할 것과 위반시 벌금 관련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장관은 승인에 따른 조건을 추가 및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승인의 이전 및 연장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 및 유산의 보전에 관련하여 이 법은 생물다양

63) *Ibid.* Chapter 3, Part 5, Division 2, Subdivision A.

64) *Ibid.* Chapter 3, Part 5, Division 2, Subdivision B.

65) *Ibid.* Chapter 3, Part 5, Division 3.

66) *Ibid.* Chapter 4, Part 7, Division 2.

성의 확인 및 조사 관련 조항, 생물지역권계획 관련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위기종 및 위기군과 이주종 및 고래와 포유류, 해양동물 등의 목록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장관은 생물다양성의 확인 및 조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지원 및 협력을 수행한다. 장관은 생물지역권 계획을 공청회를 통해 수립할 수 있으며 주정부 및 자치단체에 대해 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위기종 및 위기군을 포함한 생물종 및 생물군에 대해 목록을 제공하면서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기술하고 있다.

2)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규칙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규칙」은 2000년에 채택되었으며 2013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해당 규칙에서는 핵활동과 같은 국가환경에 대해 중요성을 지니는 사안과 양자협정의 기준, 승인을 요구하는 행위의 영향평가, 생물종 및 생물군 등의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었던 사항들 및 법률에 다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관련된 중요 사안 즉,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연방보호구역 운영 및 구역내에서의 행위, 이행, 위원회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법률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규칙에서 다루어진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동 규칙에서는 연방정부 관할지역에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연방정부 관할지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규정은 연방정부 관할지역에 적용된다. 다만, 연방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기관에서 임차한 지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임차한 지역의 이용권을 연방정부나 연방정부의 기관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된다.⁶⁷⁾ 동 규칙에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상업적, 비상업적 접근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적 접근의 경우 이익공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이 토착민의 토지에서 발생할 경우 토착민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⁶⁸⁾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생물자원에 접근을 하고자 할 경우 동 규칙에서는 접근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자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⁶⁹⁾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신청서는 장관이 다른 부처의 장관 및 이해관계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평가하며 상업적 목적의 접근의 경우에는 이익공유 등의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⁷⁰⁾ 장관은 신청허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샘플관련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⁷¹⁾

동 규칙에서는 연방정부의 관할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Coral Sea Islands Territory, the Territory of Christmas Island, the Territory of Cocos Islands에 적용되나 연방보호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⁷²⁾ 해당 규정에서는 생물종에 따른 교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생물종의 연구, 교육, 전시, 보전 및 증식 등의 목적으로 분류하여 각 목적을 위해 수출입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조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 목적의 생물종의 수출입의 경우 연구절차 및 결과를 출판하여야 하며 생물종이 연구도중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⁷³⁾

또한, 동 규칙에서는 연방보호구역 및 연방보호구역에서의 행위 관련 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토착민 거주지역에 연방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이

67) EPBC Regulation, Part 8A.

68) *Ibid.* Part 8A, Division 8A.2.

69) *Ibid.* Part 8A, Division 8A.3.

70) *Ibid.* Part 8A, Division 8A.4.

71) *Ibid.* Part 8A, Division 8A.5-6.

72) *Ibid.* Part 9.

73) *Ibid.* Part 9A.09.

사회를 두어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와 연방보호구역에서의 발굴 및 건물의 건조 등을 포함하는 일반 범죄행위 및 이에 대한 벌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방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에 대한 벌금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다.⁷⁴⁾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동 규칙에서는 이행 및 준수를 위해서 이행 감독자에 관한 규정, 위반 경고, 위반 혐의자에 대한 억류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4. 외국의 생물유전자원 관련법령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위에서 알아본 외국의 생물유전자원 법령을 토대로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에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기존 해양수산생명자원관련 법령에서는 외국인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계획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의 법령의 경우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자원이용자로 하여금 제공자로부터 사전통보승인(PIC)을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이익공유 방식에 관한 지침을 협의할 것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의 사례에서처럼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에서는 자원이용자가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접근할 때 관련 자료를 제출 할 의무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접근된 자원으로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이익공유에

74) Ibid. Part 12.

관한 규정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으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여야 보다 효율적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기존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법령에서는 외국인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을 따로 구분하여 허가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법령의 사례를 보면 필리핀 내의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협정의 경우 학술연구협정, 상업연구협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기종 채집의 경우에도 과학적 또는 증식적 목적과 상업적 목적을 구분하여 상업적 목적의 사육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허가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규칙의 경우에도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상업적·비상업적 접근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적 접근의 경우 이익공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 및 시행령에서도 우리 관할 수역 내에서의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용시 연구목적 및 상업목적으로 구분하여 요구하는 조건을 달리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상업목적의 접근의 경우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며 향후 이익공유에 대한 규정을 보다 상세히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로, 기존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법령에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획득과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을 구분해서 두고 있으며, 두 경우 모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획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해 유럽연합의 유전자원신탁등록부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럽연합의 규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유전자원신탁등록부에 등록된 기탁등록기관에서 생물자원을 획득하였을 경우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접근할 때에도 책임기관과 기탁등록기관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자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원제공자와 자원이용자 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책임기관과 기탁등록기관에 보관 중인 자원에 대해서는 기탁자의 권리, 이용자의 의무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로, 기존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법령에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다른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필리핀의 법령에서는 사전통보승인 인증서, 수수료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 및 시행령에서는 제출할 서류 및 절차에 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어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토착민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호와 계승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고야 의정서 상 토착민의 권리보호는 유전자원의 이용과 마찬가지로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해서도 이익을 공유하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과 나고야 의정서의 해양부문 이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이념으로서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는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입법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장 해양수산생명자원법 개정 방안

1. 총칙 부문 개정 방안

1) 법률 명칭 및 입법 목적

해양생명자원법과 수산생명자원법의 통합 법률의 명칭은 「(가칭)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이라고 약칭한다)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2013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이후,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일부 기능이 통합된 이후 부처의 명칭이 ‘해양수산부’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방향이며,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은 해양수산생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 관련 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의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 생명자원의 조사·등재 등 기초과학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적다는 점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 | 입법목적 규정 개정안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u>해양수산 관련 생명공학</u> 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개정

해양생명자원, 수산생명자원은 통합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하고,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
- 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생물의 구성요소 또는 유전자원
- 라. 가목 및 나목으로부터 유래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현행 해양생명자원법에 있는 농수산생명자원법 관련 적용배제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모두 삭제한다.

한편,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정의를 추가하도록 한다. 이는 생물다양성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수정한 것이다. 즉, 생물다양성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전통지식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한편, 2010년 스위스과학연구소(Swiss Academy of Science, 2010)의 ‘접근과 이익공유 유전자원 연구를 위한 관행들’에서는 전통지식을 지역사회 또는 토착민의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치를 지니는 유전자원에 관련된 정보 및 개별·집단관습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 유전자원, 영농·영어·양식기술, 전통농법·어법, 전통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 표시, 동식물 신품종, 생명

공학기술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에 관한 정의규정은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으로 유지하여 온 지식, 정보, 기술 및 관습(慣習)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도록 한다.

| 표 4-2 | 해양수산 전통지식 용어정의 개정안

목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이란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으로 유지하여 온 지식, 정보,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한편, 해양수산생명자원법에서는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공간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관할해역’이 아닌 ‘관할수역’이라는 용어로 수정한다. 기타 제2조 제8호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용어정의에서 “이 경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접근하는 생물탐사는 제외한다”라는 후단을 삭제한다.

| 표 4-3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 용어정의 개정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란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 내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접근하는 생물탐사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등은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수역에서 해양환경 또는 천

연자원 등의 탐사·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후단을 포함함으로써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획득허가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법령 적용상 오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2조 제9호의 ‘외국인’에 대한 용어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적법」 제11조의2에서는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즉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적법」 제3조 제1항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생명자원법(안) 제2조 제9호에서의 외국인은 복수국적자를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외국인의 획득허가, 공동획득허가, 권리 및 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 정부가 관할수역 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 4-4 | 외국인 정의 규정 개정안

외국인 정의 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9. “외국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p> <p>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p> <p>다. 외국정부</p>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생명자원법 제6조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양생명자원법이 해양생명 자원의 확보, 관리, 이용에 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즉,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표 4-5 | 다른법률과의 관계 규정 개정안

외국인 정의규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해양수산생명자원 위원회 부문

해양생명자원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상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생명자원확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실무급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는 농수산생명자원법 제25조 및 제25조의 2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위원의 설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 표 4-6 | 해양수산생명자원 위원회 규정 개정안

해양수산생명자원 위원회
<p>제8조의2(해양수산생명자원 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요 정책 2.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야 연구·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취득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p>제8조의3(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전문가 <p>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3. 외국인의 관할 수역 내 어업활동

외국인이 관할 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기준으로 영해 및 접속수역과 같이 EEZ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이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⁷⁵⁾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어업에 대해서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

75) 「수산업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만약 이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⁷⁶⁾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및 관리 부문

1)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해서는 해양생명자원법 제17조를 개정하여 지정 후 3년간 유효기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갱신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이는 인적, 물적 자원이 지정시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중간에 점검함으로써 기탁등록기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표 4-7 |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 규정 개정안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
<p>제1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이하 "기탁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기관에 대하여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기탁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등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기탁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p> <p>④ 기탁등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7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연구인력의 졸업,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현황보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탁등록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갱신신청을 하도록 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기탁등록기관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제19조 지정취소 사유에 지정기준 뿐만 아니라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추가한다.

| 표 4-8 |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개정안

기탁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등
<p>제19조(지정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이 지정말소를 신청한 경우

2) 분양 승인

해양생명자원법 제21조 분양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미달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국외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와 함께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농수

산생명자원법 제16조 제2항 제1호를 고려한 것이며, 육종의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자칫 지나친 규제우려를 최소화한다.

| 표 4-9 | 분양승인 규정 개정안

분양승인
<p>제19조(지정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이 지정말소를 신청한 경우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익공유 및 전통지식 부문

1)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해양수산생명자원 또는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연구·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적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법령에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제공자와 이용자 상호간에 이익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 표 4-10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규정 개정안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p>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① 해양수산생명자원 또는 해양수산 전통 지식의 연구·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양수산생명 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p> <p>②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보장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하여야 할 필수적인 계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p>

2)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제1차 정부간위원회와 제2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ABS 정보공유체계(Clearing House Mechanism), 능력배양, 인식제고, 이행준수(compliance)에 관한 세부절차, 국제다자간 이익공유체계, 재정체계, 자원 동원 관련 의제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⁷⁷⁾

이와 함께 토착민 및 토착민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정서는 전통지식의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토착민 및 토착민공동체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전통지식의 이용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고야 의정서에서 이익공유의 대상이 되는 전통지식은 토착민이나 토착민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토착민이나 토착민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나고야 의정서의

77) 자세한 내용은 박수진 외, 『해외생물자원 협력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계적 대응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13, pp.30-32 참조.

적용을 받는 전통지식이 없으나,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발굴하고 보존,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 표 4-11 |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규정 개정안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p>제26조(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발굴·연구 및 보존2. 해양수산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3.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4. 해양수산 전통지식에 관한 교육·홍보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제5장 결 론

1. 요약 및 결론

생물자원 및 그 파생물(derivatives) 1kg의 가치는 금(1만 달러/kg)이나 휘발유(1달러/kg)에 비해 약 1,200~2,000 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될 만큼 생명공학연구와 생명공학산업에 있어서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은 원천소재로서 매우 중요하다. 2006년 OECD는 2020년경 세계경제가 ‘바이오 경제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각국은 바이오산업 필수소재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공동연구개발, 기술지원,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도상국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유용 생물자원을 다량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식약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산림청), 환경부 등 부처별로 R&D사업형태로 유용 해외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해외생물자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유전물질(genetic resources)’,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 등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자원적 가치에 대한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작업은 1983년 「유전공학법」과 1983년 「생명공학육성법」의 입법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09년 5월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생명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11년부터 2012까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2013년 12월 현재 환경부는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명자원의 관리와 이용, 해외자원에 대한 협력, 관련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해양생명자원 법과 농수산생명자원법의 통합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련 법률에 대한 심층분석과 주요국의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제도적 개선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정책제언 및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향후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자원 법령의 상충관계를 해소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부처간 입법협력이 필요하다.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개정은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고야 의정서의 해양유전자원 부문 국내이행에 관해서는 모호한 점이 많다. 즉, i) 해양생명자원법 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와 ii) 생물다양성법 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의 조치, iii) 유전자원접근법안 상 국가책임기관 지위에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가 있으나, 상호 어떤 관계에 있으며, 관련 조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제13장에 규정되어 있는 해양과학조

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MSR)사는 나고야 의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규정인 바, 국내이행입법으로 1995년에 제정된 「해양과학조사법」과 해양생명자원법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양환경, 자원연구라는 기초과학(fundameatal research) 뿐만 아니라 자원탐사(exploitation of resources)를 목적으로 하는 응용과학(applied research)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양과학조사와 법적성격이 다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탐사(bioprospecting)’와의 구분 방식과 연안국의 권리 등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⁷⁸⁾

이와 관련하여 「해양과학조사법」은 2013년 8월 개정작업과 같은 해 11월 시행령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나,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과의 관계가 명확치 않다.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만 해양생명자원법을 적용하고, 나고야 의정서 상 의무인 과학적 조사에 대해서는 「해양과학조사법」을 적용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개정된 「해양과학조사법」 제10조에서 외국인 등의 의무의 일부로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공평한 공유를 보장할 것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 그 적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고야 의정서의 이익공유 방식을 국내법으로서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특히,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이행입법이라는 것을 제정 목적에 명시한 유전자원접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해양수산생명자원법과 유전자원접근법, 「해양과학조사법」등 관련 법령과의 법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작업이 시급히 필요하다. 더불어 개별 부처가 소관 법령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입법 협력을 위한 테

78) Elisa Morgera, Mattias Buck, Elsa Tsioumani Ed., *The 2010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in Perspective*, Nijhoff, 2013, pp.155-157.

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적 이행과 우리나라 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생물자원 사업에 대한 범부처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해외생물자원 확보사업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해외 유용생물자원의 체계적인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고야 의정서 Help Desk’를 통합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거나 각 부처 Help Desk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⁷⁹⁾

셋째, 자원 제공국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결과는 국내 해양생명자원 관련 연구계 및 산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필리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국가의 생물자원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가 모두 강화되고 있으므로, 정부와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해외생물자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해외협력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국내연구기관 및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원 제공국의 법제도 정보 수집,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초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해외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고, 다른 국가와의 유용소재 확보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79) 박수진 외, 『해외생물자원 협력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계적 대응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13, p.87.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박수진, 「국제법상 생명공학기술의 규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4.
- _____, 「생물다양성협약상 해양생물자원 관련 주요의제 분석을 통한 국내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2008.
- 박수진 외, 『나고야 의정서 지원 및 대응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2.
- 박수진 외, 『해외생물자원 협력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계적 대응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13.
- 박수진·최수정,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대응방안 연구 -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 박용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의 핵심논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에 관한 고찰」, 『환경정책연구』 제6권 제1호, 2007.
- 심영규, 「국제법상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제2호, 2003.
- 오윤석, 「농업유전자원법의 제정필요성에 관한 검토」, 『지식재산2』 통권 제100호, 2007.
- 정서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국제레짐(안) 분석을 통한 국내 대응전략 마련』, 2008.
- 특허청,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2007.

〈국외 문헌〉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2012)

European Parliament, *Draft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2012)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생물다양성협약 홈페이지 www.cbd.int

나고야의정서 홈페이지 www.cbd.int/abs

유럽연합 홈페이지 www.europa.eu.int

유엔 홈페이지 www.un.org

〈국내외 법령 자료〉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1998)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Regulation (2000)

Executive Order No. 247 (1995)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2005)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n the Prospecting of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1996)

Joint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Pursuant to Republic Act No. 9147
(2001)

Republic Act No. 8371 (1997)

Republic Act No. 9147 (2001)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Republic Act No. 8371

부록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 관련 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
 - 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생물의 구성요소 또는 유전자원
 - 라. 가목 및 나목으로부터 유래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해양수산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이란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으로 유지하여 온 지식, 정보,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5. “관할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領海) 및 내수(內水)
 - 나.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 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6. “현지내보존”이란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종(育種)·배양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보존”이란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란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 내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3호 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 다. 외국정부
10.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1.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이란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

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여 연구·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양수산생명공학”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확보·관리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2.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의 장려 및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제5조(기본시책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계 유지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체계의 조성
3. 해양수산생명자원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구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 종합계획 등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시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연구·등재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7.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확보를 위한 투자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제8조의2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한하여 준용한다.

제8조의2(해양수산생명자원 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요 정책
2.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야 연구·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취득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의3(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조사·등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또는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고유종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2. 품종개발 및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등에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관리 목록 등의 작성 및 등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분석·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국내 고유종,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적 연구 필요성, 유용(有用)도입종, 지식재산권 등 그 보존가치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 ① 외국인·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 관련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같은 항의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사항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제3항의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절차, 허가증발급, 허가사항 및 표시 방법, 조사계획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이 관할수역에서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과 위임·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획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같은 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획득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외국인등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관할 수역에서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 등의 탐사·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다는 혐의가 있는 때에는 정선(停船)·검색·나포(拿捕), 그 밖의 명령이나 조치(이하 이 항에서 “정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선등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시료 및 유전물질 등 자료의 제출
2. 조사 결과 및 자료를 분석한 기록의 제공
3. 조사 결과 및 자료에 대한 분석 지원
4.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을 종료하였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등이 취소

또는 획득이 중지되었을 경우 설치·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철거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국인이 소속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⑤ 외국인등이 관할수역에서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함에 있어서 국민등의 인적·물적 재산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련 조약 및 국내법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⑥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허가등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획득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을 받은 경우
- 2. 1년에 2회 이상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 중지기간 중에 획득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획득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군작전 수행이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획득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제4항의 행위를 한 경우
-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제11조제2항의 조사계획서에 따라 획득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15조(조건부 허가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재해·내란·전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寄託)·등록·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법인 및 자연인 간의 사전 통보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획득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다양성의 심각한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방법, 조사절차,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및 관리 등

제1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이하 “기탁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기관에 대하여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등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기탁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기탁등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탁등록기관 중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책임기관에 대하여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합적인 조사, 등재, 수탁, 등록 및 평가
 3. 기탁등록기관의 관리
 4.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5. 기탁등록기관 간의 정보교류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증장기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 및 보존 업무
 8. 국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책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 등재, 기탁 등록기관의 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 ⑤ 책임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정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정 또는 갱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이 지정말소를 신청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7조제1항 후단 또는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의 지정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대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다시 지정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분양승인 등) ①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량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육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분양승인, 보유량의 기준,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중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 및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탁·등록 등)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관리·이용하고 있는 자는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등록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이 종료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기탁·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등록 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탁·등록 사항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① 해양수산생명자원 또는 해

양수산 전통지식의 연구·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 ②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하여야 할 필수적인 계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발굴·연구 및 보존
2. 해양수산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4. 해양수산 전통지식에 관한 교육·홍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27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 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정

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예산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국가기관등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사업수행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조사 자료, 해양수산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조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국가기관등에 그 자료를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적합하게 전산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대상 및 제출 절차,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유종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어가에서 양식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어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해양수산생명 자원 기관·단체 등의 육성·지원)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보존 또는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

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의 중장기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작성 및 보급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정부는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2.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기지 구축에 관한 사항
3.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에 따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

물을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4조(비밀엄수)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분석·평가
2. 제25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제27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4. 제28조에 따른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5. 제29조에 따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6. 제36조에 따른 위탁사업

제3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허가등의 취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4.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제38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의 장부·서류, 그 밖의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다른 행정기관, 책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등

제40조(벌칙)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배타

적 경제수역 외의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②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1조(벌칙)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2조(벌칙) 제34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시료 및 유전물질 등

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한 자 및 분양받은 자

②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식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2. 한·중·일 해양과학조사법제의 비교 분석

1. 서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확보와 관리, 그리고 이용은 그 자원에 대한 과학조사활동에 기초하여 생물종의 증명, 학명을 파악하고, 군집 및 서식지의 분포상황, 유용성 등을 파악하게 된다. 즉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 MSR)는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해양과학조사의 광의적 의미는 인류의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연구 또는 관련 과학실험을 말하며, 여기에는 해양지질·생물·물리·화학·수리·기상·조류 등의 과학 연구를 포함한다. 특히 해양지리학, 해양생물학, 해양지질물리학 및 해양지질학이 중요한 대상 항목으로 포함된다.⁸⁰⁾ 국제사회 및 인류의 관점에서 해양과학 연구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행은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예를 들어, 특정 어족자원의 “최대 지속생산 가능량(maximum sustainable yield : MSY)”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 어족군의 크기와 번식능력에 대한 완전한 감측이 필요하며, 해양 석유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전 소재지와 개발 가능성을 확정하여 진행하게 된다. 파랑(海浪), 해류, 해저, 기후 등에 대한 연구는 항행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해양환경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어떠한 물질이 해양생태계와 생물에 손해를 조성하는지의 연구와 어떻게 그 훼손을 감소 또는 소멸시킬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해양과학

80) Soons, A.H.A., *Marine Research and the Law of the Sea*(The Hague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1982), p.124.

조사는 또한 인류의 지구 전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해저에 대한 연구조사는 인류로 하여금 지구가 움직이는 대륙 판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고, 해양 기류 체계에 대한 연구는 전 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다.⁸¹⁾

해양과학조사의 인류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과학수준으로 인해 해양과학조사의 발전사는 19세기 70년대에 이르러서야 해양에 대한 연구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양과학조사의 시작은 1972년에서 1976년 영국 해군 The Challenger호의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서 진행한 3년반 동안의 과학탐사로 알려진다.⁸²⁾ 그러나 당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구범위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으며, 과학연구에 대한 관념 또한 가능한 한 정부의 관여를 받지 않는 커다란 인류학술 연구의 환경에서 보았다.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 20세기 중반까지 해양과학조사가 연안국에 의해 관여를 받는 예는 극히 드물었으며, 특히 국가 관할권 외의 영역에서 특별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지도 않았다. 더운지 해양과학조사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통제나 제한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과학기술의 발전은 해양자원에 대한 개발능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은 인접한 해양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주장하기 시작하였

81) Churchill, R.R. & Lowe, A.V., *The Law of the Sea*, 3rd ed.(Manchester : Manchester Univ. Press : 1999), p.400.

82) Mangone, Gerald J., "The Effect of Coastal State Jurisdiction over the Seas and Seabed upon Marine Science Research", *The Law of the Sea in the 1980s*(Choon-ho, Park ed., 1983), p.294 ; 魏敏 주편, 海洋法(北京 : 法律出版社, 1987), 315면 ; 해양에서 해양조사기술 수단의 진보와 모든 지구과학의 발전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다. 영국 Challenger호는 1872년에서 1876년까지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조사(해양과학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항해를 통해 망간단괴를 채집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료는 현재에도 여전히 인용되고 있다. 楊子廣 주편, 海洋地質學, 山東 : 山東教育出版社, 2004, p.125.

다.⁸³⁾ 전체적으로 볼 때, 연안국의 관할권 내 해양과학조사는 이미 장려 또는 관여하지 않는 태도는 적극적 개입과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통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태도전환이 이루어졌다.

해양과학조사를 규율하고자 하는 태도는 국가 관할권 확대와 더불어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규범제정과 수정으로 발전되었다.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많은 연안국가들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이유로 관할권내에서 진행하는 외국의 과학조사를 규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전통적 해양국가들은 해양과학조사가 공해자유의 하나로서 연안국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결국,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의 기나긴 협상결과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3부를 통해 규정하였고,⁸⁴⁾ 이는 현행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중요한 국제법 연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2. 1982년 해양법협약과 해양과학조사

1) UNCLOS 상 공간별 해양과학조사

(1) 내수 및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연안국 영해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문제는 해양법회의 초기부터 상당한 의견 공감이 있었다. 초기에 있었던 논쟁은 영해의 범위를 둘러싸고

83) 1945년 미국이 대륙붕자원에 대한 관할과 어업자원보호 수역의 설정을 주장한 트루만 성명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어서 1947년 페루와 칠레가 영해를 200해리까지 확장한 예, 1952년 우리나라가 일명 평화선이라 칭해지는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선포한 것 등이 좋은 예이다. 문정식, 「국제법상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8), pp.1-2.

84) 제13부는 제238조에서 제257조까지 모두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국제협력·해양과학조사의 수행과 촉진·해양환경내의 과학조사 시설이나 장비·책임·분쟁해결과 잠정조치 등 6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발생한 것이며, 연안국의 영해에서의 주권 행사(즉, 해양과학조사는 반드시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 문제는 아니었다.⁸⁵⁾ 이러한 논쟁은 영해의 폭과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명확하게 되면서 논의 실익이 없게 되었으며, 해양법협약은 영해내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연안국이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영해내 해양과학조사를 규제, 허가, 실시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와 그 연안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⁶⁾ 따라서 연안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연안국이 정한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5조가 규정하는 명시적 동의라 함은 제246조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연구가 반드시 득하여야 하는 동의와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또한 제252조가 규정하는 “묵시적 동의와도 구별된다. 즉,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은 “강제동의”(「묵시적 동의」와 「동의로 간주」한다는 개념을 포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를 기초로 한다.

연안국이 조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도 연안국은 조건을 정하여 그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고, 그러한 조사 행위가 연안국의 동의없이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연안국의 법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연안국은 완전한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주권면제를 받는 조사선박, 예를 들어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경우는 연안국 관할권행사에서 제외된다.

내수에서의 과학조사문제에 대하여, 해양법협약은 아무런 규정을 하

85) Marffy, Annick de,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René-Jean Dupuy & Daniel Vignes eds., 2 *Handbook on the New Law of the Sea*(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 : 1991), chapter 20, pp.1127-1133.

86) 협약 제245조.

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내수에서의 과학조사에 연안국 동의가 필요한지는 국제관습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내수의 본질이 연안국 주권이 미치는 육지와 동등한 법률지위를 갖는다는 것으로 볼 때⁸⁷⁾, 연안국의 배타적권리가 행사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즉, 외국선박이 내수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안국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제245조가 규정하는 명시적 동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내수에 대한 접근은 권리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연안국의 자유재량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⁸⁸⁾. 내수에서의 조사는 해양법협약이 예상한 해양과학조사의 문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⁸⁹⁾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군도수역 및 국제항행용 해협

유엔해양법협약은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에 대하여도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협약상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도수역이 군도국가의 주권하에 있는 것과 같이 해양과학 조사활동은 당연히 군도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영해에 관한 해양과학조사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⁹⁰⁾

협약 제13부는 국제해협(international straits) 및 군도항로(archipelagic searlanes)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40조 규정에 따라 해양연구

87) Lagoni, Rainer, "Internal Waters, Seagoing Vessels in", edited by Bernhardt, Rudolf, In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II (Amsterdam : Elsevier, 1995), p.1036.

88) Burk, William T., "The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edited by Myres Smith McDougal, W Michael Reisman, Burns H Weston, *Toward world order and human dignity : essays in honor of Myres S. McDougal*(NewYork : Free Press, 1976),

89) Florian H. Th. Wegelein, *Marine Scientific Research*(Leiden/Bost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5), p.228.

90) R.R.Churchill & A.V.Lowe, *The Law of the Sea*, 2nd ed.(Manchester : Manchester Univ. Press, 1988), p.292.

와 수로측량 선박이 국제해협을 통과할 경우에는 연안국의 사전 허가(prior authorization) 없이 어떠한 연구나 측량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해양법협약 제54조는 과학조사나 수로측량 선박이 군도수로를 통과할 경우 제40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과학조사 선박이나 수로측량 선박이 군도항로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군도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⁹¹⁾

(3) 접속수역

해양법협약은 접속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명문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연안국의 대륙붕이 접속수역을 초과하는 외부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 제3국은 당연히 연안국에 과학조사를 신청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연안국의 대륙붕이 접속수역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안국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연안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리라 본다.

1958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은 “연안국은 영해에 접속한 공해의 일정 구역(in the zone of the high sea)에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는 접속수역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⁹²⁾ 이 규정에 따르면, 접속수역은 공해의 일부이며 연안국은 특정목적 행사를 위한 제한적 관할권을 가지고 해당 협약이 부여하지 않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즉, 논쟁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해에 관한 규범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1982년 협약에서는 연안국이 접속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in the zone of the high sea”의 용어는 삭제되었다.⁹³⁾ 또한,

91) J.Ashley Roach,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the New Law of the Sea”,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1996) 27, pp.59-63.

92)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24조 2항.

93) 협약 제33조.

협약 제5부(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영해외 그리고 영해에 인접하는 수역(an area adjacent and beyond the territorial sea)”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58년 협약과 1982년 협약규정으로 보건대, 만일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한다면 이는 접속수역과 중첩되므로 배타적 경제수역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만일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해양법협약 제86조의 공해 관련 규정에⁹⁴⁾ 따라, 접속수역은 여전히 공해의 일부에 속하게 된다.⁹⁵⁾ 따라서,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내 해양과학조사 활동 규범에 따라 연안국 동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배타적 경제수역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해에 관한 해양과학조사 규범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3국(또는 국제조직)은 연안국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게 된다.

(4)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연안국이 자연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 및 여타 관할권을 가지는 수역으로 제3국은 항행과 항공기 비행, 해저전선 및 관선의 운용 등에 관한 자유를 향유한다.⁹⁶⁾ 대륙붕 제도는 관습법으로 존재하던 것이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 의해 성문화되었고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어 규정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46조는 연안국은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규제, 허가 및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다른 국가 권리 또는 권한있는 국제조직은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4) “공해는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수 또는 군도국가의 군도수역에 속하지 않는 바다의 모든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95) E.D.Brow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 Introductory Manual*(1994), pp.128-139.

96) 협약 제58조.

통상적 상황에서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외국에 의해 해양과학조사활동을 수행하려고 요청받은 경우 동의를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때 통상적 상황이라 함은 연안국과 조사국간의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국은 특수 사정에 대하여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⁹⁸⁾ 단, 연안국이 동의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⁹⁹⁾

연안국의 동의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부여하여야 한다.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조직은 해양과학조사사업이 개시되기 6개월 전까지 연안국에 대하여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사활동은 동의 요청 후 6개월 이후에 개시될 수 있다. 협약은 제247조를 통해 연안국이 해양과학조사 동의요청에 적절하게 응할 것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연안국이 사업동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동시에 해양과학조사를 요청한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조직에 대하여 연안국이 이를 지연하거나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과학조사활동의 사문화를 방지한 규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진행하려는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조직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연안국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¹⁰⁰⁾ 연안국의 조사활동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연안국이 부여한 조건

97) 협약 제246조 4항.

98) 협약 제246조.

99) Shabtai Rosenne & Alexander Yankov(e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 A Commentary*(Dordrecht/Boston/London : Martinus Nijhoff Pub., 1991), para.246. 17(b).

100) 협약 제248조.

을 준수하여야 한다.¹⁰¹⁾

해양법협약은 만일 국가 또는 권한있는 국제조직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연안국 권리인 제249조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활동이 제248조에 의해 통보된 정보로서 관련 정보에 따라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활동의 정지를 연안국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⁰²⁾

(5) 공해 및 심해저

해양법협약 제76조는 연안국의 대륙붕이 최대 350해리 또는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을 특별히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 대륙붕 부분의 상부수역의 법적 지위는 公海가 된다. 따라서 지리 위치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기관은 200해리 외의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진행할 권리를 갖는다.¹⁰³⁾ 공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은 공해자유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이익 및 심해저 활동에 관련된 기타 국가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며 인정된다.¹⁰⁴⁾

대륙붕 이원의 하층토인 심해저에 대하여는 협약 제11장 규정에 따라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가 해양과학조사를 실행할 권리를 갖는다.¹⁰⁵⁾ 그러나 심해저에서의 조사는 평화적 목적 및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¹⁰⁶⁾

101) 협약 제249조.

102) 협약 제253조.

103) 협약 제78조와 제257조.

104) 협약 제87조.

105) 협약 제256조.

106) 협약 제143조.

유의할 것은, 유엔해양법 협약의 심의 과정에서 해양과학조사의 범위에서 자원관련 활동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협약이 “해저기구는 심해저 및 그 자원에 관한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의 수행을 증진하고 장려하며, 이용가능한 경우 그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조정하여 배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⁷⁾ 이러한 점에서 이 규정은 공해에서 해양과학조사와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도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사료된다. 즉, 공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제도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결과물은 조사국의 소유이지만,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제도는 평화적 목적 및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수행되며 또한 그 결과와 조사는 해저기구 또는 기타 국제경로를 통해 효과적으로 배포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안국과 강제성 정도를 분석할 때 각 공간별(수역)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2) 국제사회의 해양과학조사와 유사개념에 대한 논의

통상적 의미의 과학조사는 의문점이나 문제점 또는 현상 등에 대한 조사를 과학적 원칙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해양과학조사 역시 해양환경의 자연현상에 관하여 과학적 지식을 확대하기 위해 취해진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¹⁰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수로측량, 군사적 조사, 조사활동, 군사활동, 탐사 등의 개념과의 구별이 난해하고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07) 협약 제143조 2, 3항.

108) A. Soons,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the Law of the Sea*(Deventer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2), p.124.

(1) 수로측량

우선, 해양법협약은 수로측량을 해양과학조사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동 협약 제19조와 제21조 및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조사”와 구별하여 “수로측량”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는 바, 수로측량을 별개의 제도로 규율하고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군사적 조사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해양자료수집을 포함하고 있는 해양 및 연안수역에서 취해진 활동에 관한 것이다. 군사적 조사는 해양학, 해양지질, 지리, 화학, 생물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군사적 조사에 사용되는 자료 수집방법은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해당 활동에서 얻어진 정보는 군사적으로 전용되어 이용되기도 한다. 조사활동은 수로측량과 군사적 조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협약은 조사와 해양과학조사 그리고 수로측량과 조사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군사활동은 통상적인 선박운용, 기동훈련, 항공기의 선상 이착륙, 군사장비의 운용, 군사연습, 정보수집, 무기연습, 화기시험 및 군사적 조사를 포함한다. 그 외에 탐사는 생물자원과 비생물자원 부존 수역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해양과학조사가 아닌 자원 탐사라고 보아야 한다.

해양과학조사의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특히 해석상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수로측량과 군사활동을 들 수 있다. 해양과학조사는 순수해양과학조사(pure MSR)와 응용해양과학조사(applied MSR)로 구별될 수 있는 바, 전자는 그 응용성과는 관계없이 해양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기 위한 과학조사이며, 후자는 특별한 실용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기준은 조사의 목적이나 또는 조사자의 동기 여부에 따른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 첫째, 기초 지질학상의 조사는 석유회사에게 상업적으로 유용하며, 둘

째, 순수생물학적 조사는 상업적 어업에 유용하다. 셋째, 해양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기초조사는 군사용 무기 및 탐지시스템의 설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⁹⁾ 그리고 수로측량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군사적 조사를 포함하는 군사적 활동과 개괄 탐사 및 조사도 해양과학조사와 구별된다.¹¹⁰⁾

수로측량(Hydrographic survey)은 해양의 수심 측량 및 파도, 해류, 조수 현상의 연구, 수중 암석·사주·기타 숨겨진 위험의 조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수로측량에서 수집된 대부분의 자료는 항행용 해도의 작성과 같은 항행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¹¹¹⁾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제21조 제1항 (g)호 및 제40조에서 해양과학조사와 구분하여 ‘수로측량’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는 바, 수로측량을 별개의 제도로 규율하고 있다. ‘수로측량’을 포괄한다고 판단되는 ‘측량(survey)’에 대하여는 제40조 외에 제19조 제2항(j)호 또한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 선박에 의한 “조사활동 측량 활동”을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은 수로측량에 대하여 해양과학조사와 별도의 제도로 접근하면서도, 수로측량에 대하여는 오직 영해와 국제항행용 해협 및 군도항로대에 관련하여만 명시적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국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수행되는 수로측량이 연안국 통제없이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는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한 반면에 수로측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

109) Mukherjee, “The consent regime of oceanic research in the new law of the sea”, *Marine Policy*, Vol. 5, No.2(1981), pp.99-101.

110) A. Soons, *op.cit.*, p.125.

111) A. Roach and R. Smith, *United States Responses to Excessive Maritime Claims*(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6), p.427.

로 연안국의 허가, 동의 또는 통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¹¹²⁾ 수로측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논거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찾고 있다. 제58조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동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의 자유(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서구국가들은 수로측량의 경우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수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58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의 자유’에 해당됨으로 연안국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¹¹³⁾

반면, 수로측량에 대한 연안국의 규제를 강조하는 국가에서는 수로측량 자료의 안보 위해적 성격과 자료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자의 사례로는 2001년 미국 해군소속의 수로측량선 Bowditch호와 영국 HMS Scott호의 측량활동에 대한 항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주장되는 황해 인근에서 전개된 미국의 측량행위에 대하여 중국은 측량활동 중지와 퇴거 조치를 취하였고, 2002년에는 측량법을 개정하는 등¹¹⁴⁾ ‘측량활동’에 대한 연안국 통제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¹¹⁵⁾. 인도 역시 2001년 Nicobar 섬 인근에서 전개된

112) Mark J. Valencia, Kazumine Akimoto, “Guidelines for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Marine Policy*”, Vol. 30(2006), p.706. 이용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Ocean and Polar Research*, Vol.28(3), p.265에서 재인용.

113) Moritaka Hayashi, “Military and intelligence gathering activities in the EEZ: definition of Key terms”, *Marine Policy*, Vol.29(2005), p.131. 이용희, 전제논문, p.265.

114) 2002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중국 관할해역에서의 모든 측량활동은 반드시 중국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의 합자 또는 합작형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115) Jon M. Van Dyke, “Military ships and planes operat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영국의 측량행위에 대하여 “허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항의를 제기함으로써 측량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¹¹⁶⁾.

그러나 수로측량을 해양과학조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움직임은 국가관행 뿐 아니라 많은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시도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외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로측량 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980년대까지의 UN에 등록된 많은 국가의 해양과학조사법은 최소한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¹¹⁷⁾ 이를 뒷받침한다. 수로측량의 복합적 사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기구로는 IHO(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를 들 수 있다.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IHO의 이러한 견해는 ABLOS(Advisory Body on the Law of the Sea) 관련 회의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IHO는 인접수역에 대한 수로학적 지식(hydrographic knowledge)을 국가 개발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기반시설(national infrastruc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¹⁸⁾. 이는 수로측량이라는 것이 우선적 사용 목적인 항행 안전을 위한 해도 작성의 목적 외에 어업, 관광 및 자원탐사와 개발을 포함한 일반적 경제행위에도 활용될 가능성¹¹⁹⁾에 기초한 것임은 분명하다. 호주 학자인 Bateman 역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로학적 자료가 연안국에게는 경제적 가치가

another country”, *Marine Policy*, Vol.28(2004), p. 34.

116) *Ibid.*

117) UN, Office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The Law of the Sea : National Legislation, Regulations and Supplementary Documents on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New York : UN, 1989), pp.143-154.

118) IHO, *The Need for a Hydrographic Service in IHO publication M2 - National Maritime Policies and Hydrographic Services*(Monaco :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2001), Chapter I 참조.

119) Sam Bateman, “Hydrographic Surveying in EEZ - Is it Marine Science Research?”, edited by Myron H. Nordquist, Tommy T.B.Koh, and J.Norton Moore, *Freedom of Seas, Passage Rights and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Leiden/Bost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p.125.

있기 때문에 수행 주체와 방법에 관계없이 해당 자료에 대한 통제와 관리 권은 분명히 연안국에게 있다는 입장이다.¹²⁰⁾ Bateman은 이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근거조항으로 제56조 제1항 (a)호의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other activities for the economic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of the zone)”의 범주에 수로학적 조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¹²¹⁾.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논의는 IOC(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와 비정부 전문가 그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IOC의 ABELOS(Advisory Body of Experts on the Law of the Sea)¹²²⁾를 통한 논의는 측량활동이 연안국 통제에 미치지 않는다는 미국 대표단의 주장과 대치되면서 결론에 이르지 않았으나¹²³⁾, 여전히 새로운 과학기술발전을 반영한 관측 수단을 통한 해양학자료 수집 등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비행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도 주목할 만한 하다¹²⁴⁾. 이 가이드라인은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의 일방적 행위로 인하여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의 입

120) Ibid.

121) Sam Bateman, “Hydrographic surveying in the EEZ:differences and overlaps with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rine Policy*, Vol.29(2005). pp.169-170.

122) ABELOS는 1997년 7월 개최된 IOC 총회에서 채택된 Resolution X IX-19에 의거하여 1998년 11월 설치되었으며, 주로 IOC 총회, 집행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23) IOC ABELOS, *Report of the First Session*(Paris : IOC-ABELOS, 2001) 참조.

124) 이 가이드라인은 EEZ Group 21로 명명된 전문가 그룹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회의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일본의 해양정책재단(OPRF)이 후원하고 일본재단(Japanese Foundation)의 지원하에 진행되었다. Mark J. Valencia, Kazumine Akimoto, “Guidelines for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Marine Policy*, Vol. 30(2006), p.704.

장과 최근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¹²⁵⁾ 이 지침은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¹²⁶⁾,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로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⁷⁾ 단, 동 지침 제9조 (a) 후단은 “선박이 EEZ를 항행하는 동안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요구되는 그 선박에 의한 항행데이터 수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 ‘해당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자료수집’에 대하여는 연안국 동의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2) 군사적 조사

군사적 조사(military surveys)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해양자료 수집을 포함하는 해양 및 연안수역에서 취해진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양학, 해양지질·지리·화학·생물 및 음향자료를 포함한다. 군사적 조사에 사용된 자료수집방법은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자료 또는 정보를 군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 구별되는 점이다.¹²⁸⁾ 유엔해양법협약은 군사적 조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조사가 연안국의 영해나 군도수역 외측에서 연안국에 의해 여하한 방법으로 규제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군사적 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인 군사활동(military activities)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240조 (a)호에서는 해양과학조사의 실시를 위한 일반원칙으로서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실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을 위한 조사 및 군사활동은 당연히 해양과학조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

125) 이용희, 전제논문, p.268.

126) Guidelines for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제1조.

127) Guidelines for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제9조와 제10조.

128) *Ibid.*

는다고 보아야 한다.

군사적 조사에 대한 최근의 예로는 2006년 발생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과 미국간 군사적 목적의 수로측량활동을 둘러싼 갈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 해감총대(中國海監 No.27)은 자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에서 군사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던 미국 해군 선박 SUMNER/Mary Sears에 대하여 중국의 해양과학조사법의 적용을 주장하였고, 미국은 “국제 해역에서의 합법적 군사활동이며, 해양과학조사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¹²⁹⁾

상술한 내용으로 보건대, 유엔해양법협약 제13부를 통해 규정된 해양과학조사의 일반적 원칙은 대단히 기능적이며, 국가 관행 또한 협약의 요구와 의지에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대부분 국가들이 국내법을 통해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해양과학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제정하고 있고, 해양과학조사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배포로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행해지는 해양과학조사 관련 규정의 이행과 해석에 대하여는 여전히 규명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3. 한·중·일의 해양과학조사 법제와 해석

1)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 법제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3장(해양과학조사)을 국내적으로 수

129) Guifang Xue,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Hydrographic Survey in the EEZs: Closing up the Legal Loopholes?”, edited by Myron H. Nordquist, Tommy T.B.Koh, and J.Norton Moore, *Freedom of Seas, Passage Rights and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Leiden/Bost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p.125.

용하고, 국민이 국가기관 등의 예산으로 수행한 조사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¹³⁰⁾ 위하여 1995년 법률 제4941호로 해양과학조사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동년 7월과 11월 각각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을 완비하였다.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은 이후 2013년 8월 13일 개정되었고(2013년 11월 14일 발효), 관련 시행령 또한 2013년 11월 13일 개정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은 유엔해양법협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섭외적이며 국제법적 성격의 띠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와 내국인의 해양과학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절차법, 후자에 대하여는 규제법이라기보다는 지원 육성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1) 적용범위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은 총 4개장, 25개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제3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제4장은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해양의 자연현상을 구명하기 위하여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로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동을 억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3조를 통해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 제246조 제3항의 “순수한 과학조사”정신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¹³¹⁾.

법의 적용 대상해역은 내수, 영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130)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131) 최종화, 『현대 국제해양법』(서울 : 도서출판 두남, 2004), p.215

해역을 포괄하며, 이중 외국인에 대하여는 내수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¹³²⁾. 그런데 중국 및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법제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 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할해역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개정전 해양과학조사법이 규정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¹³³⁾, 그 공간적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법이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대한민국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수역에서의 정착성어족(UNCLOS 제77조 제4항의 정착성어족에 속하는 생물)에 관련된 어업활동 등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해저광물(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륙붕에 대하여는 연안국의 권원 주장이 필요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대륙붕에서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대한 중대한 법적 흠결을 보인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 국내법이 다루는 대상 자원이 대륙붕 자원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개정, 또는 그 전단계로서 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 절차를 규정한 「해양과학조사법」에서 그 공간적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고려되었고, 이는 개정된 제2조 제4항의 정의 규정을 통해 반영되었다.

132)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133) 舊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 제4항.

(2)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은 유엔해양법협약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행위를 해역별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양과학조사 실시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¹³⁴⁾. 만일 외국인이 영해 외측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양과학조사 실시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¹³⁵⁾. 단,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와 달리 영해외측 해양과학조사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계획서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도록 한다는 차이가 있다¹³⁶⁾. 이는 영해와 영해외측 해역의 법적 성격이 가지는 차이에 기인한다. 한국 해양과학조사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 246조 제5항이 규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다른 국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사업의 동의 거부’사유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1)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해양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대륙붕의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할 물질의 투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3)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인공섬, 설비 또는 구조물을 건조(建造)하여 사용·운용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4)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관련 국내법 또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5) 국민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국민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6)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해양

134)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135)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

136)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 제3항.

과학조사 실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7) 해양과학조사의 동의 신청을 한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라 실시한 다른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동의 거부사유로 추가하고 있다¹³⁷⁾. 이는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법 제8조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동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249조의 규정과 동일하다. 단, 공동조사에 참여한 국민 등이 영해 및 영해외측에서의 조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제출하면 된다¹³⁸⁾.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등이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조사자료와 결과의 공개 및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¹³⁹⁾. 동 법은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정지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전자는 정지의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국방부장관이 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가 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등이 중지 사유에 해당한다¹⁴⁰⁾.

한편, 외국인 등이 허가없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의없이 대한민국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37)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 제4항.

138) 「해양과학조사법」 제8조.

139) 「해양과학조사법」 제11조.

140) 「해양과학조사법」 제12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당해 선박·설비·장비 및 얻어진 조사자료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¹⁾. 개정된 내용은 우리나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가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동법 제5조 제2항 제11호가 “조사 또는 측량”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해양과학조사법 상의 벌금을 동일하게 조정, 형평성을 기할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3) 수로측량에 대한 태도

우리나라는 기존의 「수로업무법」을 「측량법」 및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12.10 시행)로 통합 제정하였는바, 동법 제2조 5항은 수로측량을 “해양의 수심·지구자기·중력·지형·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순수한 과학적 용어상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11항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인 “수로조사”를 사용하여 이를 “해상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관할권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측량·해양관측·항로조사 및 해양지명조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수로조사”와 “수로측량”을 구분함으로써 수로조사가 수로측량에 비하여 특정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수로측량”의 목적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규정은 해양의 보전, 이용, 개발 및 해양관할권 확보에 이용하게 하기 위한 수로측량을 수로조사의 한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항행의 안전을 위한 수로측량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는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의 해

141) 「해양과학조사법」 제24조.

석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해양과학조사법에 수로측량 통제 방안을 규정토록 하는 요구가 있었다. 유엔해양법협약 역시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이 용어적으로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영해 이원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연안국에게 부여할 뿐 수로측량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 활동은 조사기술이나 조사방법, 조사수단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점에서 양자를 현실적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협약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동 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이 배제되었으며 자유롭게 수행 가능하다는 논리로 확대되기에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¹⁴²⁾. 이 점과 관련하여 미국은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로측량에 대하여 연안국의 규제권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운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학자들을 통하여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국가들은 수로측량이 본래적 목적인 해도 작성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과 군사적 이용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안국에게 일정한 규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Soons 교수 역시 수로측량자료의 활용성에 따라 연안국의 관할권 부여 주장에 대한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예컨대 수로측량이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과 연계된 것이라면 연안국의 관할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¹⁴³⁾. 수로측량의 다원적 목적 활용도에 대하여는 IHO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IHO는 “수로측량자료는 해도 편찬 뿐 아니라, 연안해역 관리, 환경모니터링, 석유 및 광물자원 개발, 법적 및 관할권 문제 등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¹⁴⁴⁾, Bateman은 실

142) 이용희, 전제논문, p.267

143) A. Soons, *op.cit.*, p.157

144)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IHO Standards for Hydrographic Surveys*, Monaco(1998), p.1.

제 IHO가 수로측량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타국 EEZ에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수로측량 자료를 산출하는 행동이 과연 자유로이 행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갖는다¹⁴⁵⁾.

물론 이러한 이유로 수로측량을 해양과학조사로 간주하는 주장에 대하여도 찬동하기 어렵다. 협약이 이들 양자를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양자는 여전히 해도작성과 해양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은 설령 양자가 별개의 법개념으로 출발하였을 지라도, 수로측량 행위가 연안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와 대등하다는 점에서 연안국의 동의를 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국내법은 이들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협약에 근거하여 이들 양자가 별개의 법개념을 가지며, 그 행위의 결과와 수행 수단의 구분이 난해하다는 점에서 수로측량 역시 해양과학조사와 같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수로측량에 대한 연안국의 통제에 관한 입법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해양과학조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이는 해양과학조사법의 입법적 불비가 아닌 수로측량 관련 법규범의 입법 불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제기 등은 이들 양자에 대한 법적 해석을 분명하게 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중·일을 비롯한 각국 전문가들이 아시아 태평양지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항행과 상공비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권리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바, 해당 지침에서는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

145) Bateman, S., "Hydrographic surveying in the EEZ: differences and overlaps with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rine Policy*(2005), 29, pp.163-174.

를 별도로 규정하고, 전자에 대하여도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수로측량조사는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⁶⁾.

2) 일본의 해양과학조사 법제

일본은 1996년 6월 20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동년 6월 14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여 신해양질서에 따른 해양관할권제도의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1) 해양과학조사 법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제도로는 「국가관할하의 지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1996년)¹⁴⁷⁾이 있다. 한국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통해 조사와 측량 등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은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후자에서만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행하여지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는 자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¹⁴⁸⁾.

일본이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별도 입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지침에서는 단지 대상 영역별 관할 기관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라 판단된다.

한편, 일본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지침은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서도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찾아

146) 동 지침 IX.

147) U. N. Office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Law of the Sea Bulletin*, No. 33, 1997, pp.38-44.

148) 「일본 해양과학조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볼 수 없다. 단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어서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인공섬, 시설 및 구축물의 설치, 건설, 운용 및 이용,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그리고 해양 과학조사,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탐사 및 개발활동(앞에 열거한 것을 제외)” 등에는 일본의 국내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해양과학조사를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¹⁴⁹⁾.

(2)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1996년 제정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지침은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외국인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일본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일본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¹⁵⁰⁾.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외국 국민이나 기관은 일본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최소한 조사활동 실시 예정일 6월 전까지 일본 외무성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와 함께 공식적인 동의요청을 제출하여야 한다¹⁵¹⁾. 해당 조사사업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동물이나 식물의 포획, 채취 또는 탐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본의 농림수산성 장관으로부터 개별적 승인이 필요하다. 신청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일정한 신청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본의 영해에서 해양 동물 및 식물의 포획 및 채취는 「외국민의 어업운용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승인받을 수 없다¹⁵²⁾.

149)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 제3조 제1항.

150) 「일본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지침」 제1조.

151) 「일본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지침」 제2조.

152) 「일본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지침」 제3조.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해양과학조사 법제 또한 해양과학조사와 경제적 목적의 탐사 및 개발활동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⁵³⁾. 또한 지침에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을 통해 적용(별칙 포함)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해양과학조사 법제는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준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서도 한국이나 중국에서 규정되는 동의 부여에 대한 가부 규정, 별칙조항의 부재 등은 주변국과의 해양과학조사 운용에 관한 잠재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¹⁵⁴⁾.

(3) 수로측량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 대한 일본의 국내법 태도는 명확하지 않다. 수로측량의 개념에 대하여는 「수로업무법」이 “수역 측량 및 토지 측량 그리고 그 성과를 항해에 이용하기 위한 지자기 측량”으로 정의하고 있으나¹⁵⁵⁾, 적용 대상에 대하여는 “해상보안청과 그 이외의 자”로 제한적이다. 이때, “그 외의 자”란 해상보안청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외국인의 수로측량에 대하여는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법상 수로측량에 대한 외국인 규율 근거가 없는 것과 같으며, 결국 외국인의 일본 관할해역 내 수로측량에 대한 접근 해석은 일본의 재량적 판단에 의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53)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 제3조.

154) 이용희·권문상·박성욱,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국제규범과 주변국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제2호(1998), pp. 177-178.

155) 수로업무법 제2조.

한·일 간에는 2006년 일본의 독도주변 수로측량을 둘러싼 갈등시 당시 일본측 발언을 검토하여 보면 독도 주변수역을 자국 관할해역으로 보고 있으며, 자국 관할해역에서의 수로측량은 연안국의 권리라는 입장을 주장하였는 바, 일본의 입장도 자국 관할해역에서의 수로측량은 연안국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중국의 해양과학조사 정책

(1) 해양과학조사 법제

중국은 1996년 6월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1992년 2월 25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정, 1998년 6월 26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을 제정함으로써 관할수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를 완비하였다. 전자는 제11조를 통해 과학조사와 해양작업에 대하여 규정, 외국인이 중국 영해 내에서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기관의 비준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 역시 제9조를 통해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법제도로는 1996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섬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국무원령 제199호)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 법체계상 「「섬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은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으로서의 행정법규에 해당된다. 섬외 해양과학연구 관리규정은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관할수역 내에서 진행되는 섬외 해양과학활동의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과학연구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국가 안전과 해양권익을 준수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⁵⁶⁾.

「「섬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은 “국제조직·외국의 조직 및 개인이 평화적 목적으로, 단독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직(이하 “중국측”이라 함)과

156) 「섬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 제1조.

합작하여 선박 또는 기타 탑재기구·시설을 사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내해·영해 및 중화인민공화국 관할의 기타 해역 내에서 진행하는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 등의 탐사연구 활동”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⁵⁷⁾. 즉, 중국은 “내해와 영해”,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해역”을 적용 범위로 하고 있으며, 이때 후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의미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관련 규정이 국제조직 및 외국과 중국측과의 해양과학조사 합작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추진 주체를 전자에 대하여는 “조직 및 개인”으로 규정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조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규정의 제정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자국의 관할해역 내 자원 및 안전 요소에 대한 보호적 장치 확보를 위해 정부의 효율적 통제 범위에 있는 해양관련 기관(조직)으로 제한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 규정은 해양 광물 자원(해양 석유자원 포함) 탐사·해양 어업 자원 조사 및 국가가 중점 보호하는 해양 야생 동물 고찰 등을 위한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¹⁵⁸⁾.

한편, 중국은 자국 영역과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의 모든 측량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 「측량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7조를 통해 “외국의 기구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측량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관련부처 또는 기관과 합자 또는 합작형식으로 진행하며 국가 비밀과 관계되거나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수로측량을 포함한 제반 측량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해역의 위치, 깊이, 높이, 면적,

157) 「섭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 제2조.

158) 「섭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 제2조.

길이 등 주요 지리정보 데이터에 대하여는 국무원 측량행정 주관부서의 심사와 확인,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 및 군 측량 부서와의 협의, 국무원 허가라는 절차를 통해¹⁵⁹⁾ 인정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양과학조사보다 엄격한 법제도로 통제하고 있다.

(2)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중국 해양과학조사법제는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내해와 영해,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중국측과 공동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후자는 외국인이 단독 또는 중국측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¹⁶⁰⁾.

외국인이 단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사예정일 6개월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해 국가행정 주관부서에 비준을 받거나 또는 국가해양 주관부서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동조사인 경우에는 중국측이 해양과학연구계획서를 국가 해양행정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외교부·군사 주관부서, 국무원 기타 관련부서와 함께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비준 여부는 4개월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¹⁶¹⁾.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 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 제3항 규정과 유사하다.

특이할 만 한 점은 허가된 섬외 해양과학연구활동의 신청인은 반드시 매 항해 개시 2월 전에 해상 선박활동 계획을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해상 선박활동 계획을 접수한지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가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시에 국무원 유관부서에 통보하도

159) 측량법 제32조.

160) 「섬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 제4조.

161) 「섬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 제5조.

록 하고 있다¹⁶²⁾. 해양과학연구계획 또는 해상선박활동계획의 진행과정 중 중요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¹⁶³⁾.

그리고 조사요건으로 내수 및 영해내에서 해양과학연구활동을 진행할 경우 작업선박은 그리니치시간으로 매일 00시와 08시에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에 선박위치와 활동정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기타 해역에서 해양과학연구활동을 진행할 경우에 작업선박은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에 선박위치와 활동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¹⁶⁴⁾.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이 단독 또는 중국측과 공동조사를 외국 선적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히 이러한 보고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국가 해양행정 주관부서 또는 그 파출기관이나 위탁기관은 외국 국적 조사선에 대한 해상 감시 또는 등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⁶⁵⁾. 또한 외국 조사선은 과학조사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상기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¹⁶⁶⁾.

조사 활동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중국 내수와 영해에서의 공동조사에서 획득한 자료와 시료는 중국의 소유이며, 공동연구에 참가하는 외국인은 계약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타 해역에서 공동조사로 획득한 자료와 시료는 중국의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분할하거나 또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⁶⁷⁾. 그리고 외국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해양과학연구활동에서 획득한 기초자료와 시료는 중국의 관련조직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반드시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에 획득한 자료의 복사본과

162) 「섭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 제6조.

163) 「섭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 제7조.

164) 「섭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 제9조.

165) 「섭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 제9조.

166) 「섭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 제11조.

167) 「섭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 제10조.

분리 가능한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¹⁶⁸⁾.

중국과 외국인 간 공동연구 후에는, 내국인은 반드시 연구성과와 자료 목록초본을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와 국무원 관련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단독으로 진행하는 해양과학연구활동 종료 후, 반드시 국가 해양행정주관부서에 활동의 결과에 따라 취득된 자료 또는 복사본과 시료 또는 분리 가능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간에 따라 중간 연구성과와 최종 연구성과와 결론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¹⁶⁹⁾.

이 외에, 관리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해당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기기와 획득된 자료를 몰수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또는 상기 조치와 아울러 5만원 인민폐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본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혔거나 또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와 범죄행위가 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부가할 수도 있다¹⁷⁰⁾. 한편 중국해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양환경에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임의로 굴착하거나 또는 화약작업을 금지하고 있다¹⁷¹⁾.

(3) 수로측량

중국 국내법에서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수로측량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목적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연안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입장은 미국 등의 서구국가가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의 일환으로 수로측량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는 반론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이중 중

168) 「섬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 제12조.

169) 「섬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 제12조.

170) 「섬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 제13조.

171) 「섬외 해양과학조사 관리규정」 제8조.

국이 수로측량에 대한 연안국 규제를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로는 “안보적 위해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1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이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동시에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due regard) 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수로측량의 경우 사실상 각 정부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¹⁷²⁾, 수로측량을 통하여 획득된 정보가 해도작성 이외에 군사적 목적을 비롯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등이 연안국에게는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는 지난 2001년과 2002년 미국 해군소속 수로측량선 Bowditch호와 영국 해군소속 수로측량선 HMS Scott호가 자국 EEZ에서 수행한 수로측량 행위가 자국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지시키고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으로 물러나도록 하는 등의 실제적인 행동을 취한 바 있다¹⁷³⁾.

중국은 미국 해군 수로측량선에 의한 수로측량과 군사활동을 두고 갈등이 있는 후, 자국 측량법을 개정하였는데¹⁷⁴⁾, 이에 따르면 중국의 수로측량에 대한 정책 방향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제7조와 제32조, 제51조는 최소한 중국의 영역과 관할해역에서 행해지는 외국인(기관)의 제반 측량활동은 반드시 합자 또는 합작 형식을 통해야 하며, 주관 부서의 비준을 얻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측량성과와 측량도구를 몰수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수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배타적 경제

172) 이용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Ocean and Polar Research*, Vol 28(3)(2006), p.266.

173) Sam Bateman, “Hydrographic surveying in the EEZ: differences and overlaps with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rine Policy*, Vol.29(2005). pp.167-168.

174) 2002년 8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국 주석령 제75호.

수역에서의 모든 측량행위 및 도면작성행위는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장비 및 자료를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⁵⁾. 즉, 중국 국내법상 ‘측량’행위는 사실상 해양과학조사 행위 보다 강하게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로측량을 해양과학조사와 구별하려는 시도는 국내법적으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 현황과 해양생명자원법제와의 관계

1) 해양과학조사 현황 및 해양생명자원법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해양과학조사는 사실 내국인에게는 자유로운 접근을 규정하고, 외국인에게 접근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분히 섭외적 성격의 법이다. 관할해역의 범위를 MSR법과 일치한다.

해양생명자원법 상의 공간 범위와 농수산생명자원법상의 공간 범위 일치, 내수 및 내수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접근과 해양생명자원예의 외국인의 접근 방식은 다르면서도, 그 행위에 대한 통제와 모니터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의 허가 또는 동의가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생명 및 농수산생명자원법은 생명자원 접근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며, 개정된 해양과학조사법은 제10조의 외국인 의무 규정을 통해 “9. 해양과학조사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공평한 공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상기 두 법의 통합법에서 규정할 경우 해당 규정과 일부 충돌될 수도 있으나, 엄격하게

175) Jon M. Van Dyke, “Military ships and plaines operat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anther country”, *Marine Policy*, Vol.28(2004), p. 34.

해석 또는 실무적 시행과정에서는 충돌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상기 두 법상이 규정한 ‘해양생명자원 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접근을 자원에 대한 접근으로 보고, 후자의 「해양과학조사법」을 “해양의 자연 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하층토(下層土)·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1982년 해양법협약과 1958년 협약은 국가관할권 하에 있는 수역에서의 조사는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데서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양자는 공해에서의 과학조사는 1982년 협약에서 공해자유의 하나로 명문화 하였다는 점,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조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동의로¹⁷⁶⁾ 간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연안국이 동의를 유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것 또한 양자의 차이로 할 수 있다¹⁷⁷⁾.

한·중·일 삼국의 해양과학조사법제를 비교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대부분의 원칙과 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삼국이 공통적으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단일 법제를 갖추고 있으며, 조사계획서 제출 기한, 영해외 영해외측 관할해역에의 접근 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접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과학조사 접근에 대하여 중국이 내수와 영해, EEZ와 대륙붕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 방법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 내수와 영해

176) 협약 제252조.

177) 박찬호,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과학조사문제」, 『STRATEGY 21』, 9호(봄·여름호), p.198

에서 획득한 자료에 대한 중국 소유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영해 내측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는 중국의 전속적 소유권과 함께 공동조사를 진행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무상 이용권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영해 외측 해역에서 외국이 단독으로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도 중국이 무상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등은 주변국과의 해양과학조사 집행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이 야기될 수 있다.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로측량을 공해의 자유중 항행의 자유에 관련된 행위로 간주하고 동 행위의 자유를 인정하는 태도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 적용이나 실질적인 행위의 이행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수로측량의 자유를 전제로 할 때, 명목상의 수로측량을 이유로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로측량선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로측량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안국의 이익에 중대한 침해가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행하여지는 수로측량에 대해서도 해양과학조사에 준하는 제도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¹⁷⁸⁾.

한·중·일 삼국의 해양과학조사법 및 수로측량 관련 법제에서는 이들 양자에 대한 명확한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단, 수로측량에 관한 구체적 사례 또는 논의 사실에 근거할 때, 한·중·일 삼국의 수로측량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지 않으나 사실상 연안국에 의한 동의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의견은 일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것이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의 양자에 대한 별개의 법개념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 양자의 실질적 목적과 활용성, 연안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도출된 결과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178) 이용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Ocean and Polar Research, Vol 28(3)(2006), p.270.

러나 한중일 삼국의 수로측량 관련 법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의 국내법에는 외국인의 수로측량에 대한 규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중국의 측량법은 외국인의 해역 측량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접근 절차와 동의 단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위법한 측량행위의 결과에 대하여는 해양과학조사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로측량으로 획득된 결과의 안보적 가치 또는 경제적 가치를 근거로 연안국의 강한 규제 범주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해양수산생명자원 법령 재정비 방안 연구

2013年 12月 29日 印刷

2013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김 성 귀
發行處	韓國海洋水産開發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전 화	02-2105-2700 FAX: 02-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組版・印刷 / 세븐스가든 02-2263-0066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